

철도 민영화와 투쟁의 과제

8 ~ 9 면

경제 위기와 드러나는 박근혜 본색

2, 7, 13 면

이집트
군부 반혁명에
맞선 투쟁

11 면

역사 전쟁
뉴라이트 교과서와
한국사

5 면

40년 전 오늘
칠레 혁명과
반혁명

12 면

발행인_ 김민식 편집인_ 김민식
인쇄인_ (주)아아피디 이승철
등록번호_ 서울다08179 (격주21)
등록연월일_ 2009년 1월 12일
주소_ 서울시 중구 회현동2가 57-1 2층
전화_ 02-777-2792 팩스_ 02-6499-2791
제보_ 02-777-2791 E-Mail_ left21@left21.com

ISSN 2005-8217



Left21.com

제111호 | 2013년 9월 9일 ~ 9월 29일 | 값 1,800원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 반자본주의 | 노동자 연대
추석 연휴를 고려해 다음 신문은 9월 30일에 발행됩니다.

리프트21

국정원이야말로 민주주의 파괴범

왜곡·과장을 통한
고통전가 길 닦기용

마녀사냥
중단하라

▶ 관련 기사 2 ~ 5 면

9월 4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 등
의안이 통과됐다. 법무부 장관 황교안은 “수사
중”이라며 아무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지만 압
도 다수의 의원들은 거리낌없이 찬성표를 던
졌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무섭게 국정원
은 이석기 의원을 강제구인했다. 이 모든 일이
국정원이 “내란음모” 카드를 들고 나온 지 일
주일 만에 벌어졌다.

〈레프트21〉과 노동자연대다함께는 그동안
우파들과는 전혀 다른 혁명적 관점에서 이석
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에 대해 비판을 해 왔다.
예컨대 우리는 이 동지들이 급진적 강령을
후퇴시키며 친자본주의 정당인 참여당과 통합
하는 것에 반대했다. 민주당과의 인민전선적
(계급동맹적) ‘야권연대’를 우선시해 계급투쟁
에 끼친 해악도 비판했다.

최근에도 통합진보당은 친민주당 NGO들
을 추수하며 촛불이 더 강력한 반정부 투쟁으
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 협력적이지

않은 종파적 태도로 운동 내에서 반목과 분열
을 일으켜 온 것도 문제다.

그러나 이것이 광기어린 마녀사냥에서 이
동지들을 방어하지 않는 것으로 연결될 이유
는 하나도 없다. 한국 사회를 변혁하기 위해서
어떤 노선이 옳은지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토
론과 무엇보다 실천에서 입증할 문제이기 때
문이다. 그런데 국가 탄압은 진보진영 전체를
위축시키고 입에 재갈을 물린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황당무계하게 부풀려
진 마녀사냥이다. 지난 일주일 동안 조중동과
진 종편은 하루종일 “내란”, “총기”, “파괴”, “살
상” 등의 단어들을 사용하며 공포심을 조장했
다. 그러나 전쟁 위기가 임박했다는 잘못된 정
세 판단에 근거해 일부 과격한 발언을 쏟아 낸
회합을 ‘내란음모’라고 모는 것은 말도 안된다.
내란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실행 능력도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 3면으로 이어짐



리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26개 호) 5만 원
2년 (52개 호) 10만 원

• 신청 : 02-777-2792,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도 정기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 등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 left21@left21.com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후원 및 정기구독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우리은행 1005-301-422382 / 신한은행 140-008-401399 / 농협 301-0010-1643-71 / 하나은행 296-910007-15804

누구의 말일까요?

“부시의 제국주의가 헐리우드 액션 영화였다면, 오바마식 제국주의는 프랑스 실존주의 영화처럼 속도감이 떨어지고 뭔가 고민이 많다.”

이람 네티즌

“아버지[박정희]는 제계 국가관, 정치철학을 형성하는 데 가장 영향을 미친 분”

박근혜, 역시나

이상규 : [RO 모임의] 결성 시기는 언제입니까?

황교안 : 수사 중입니다.

이상규 : 결성 장소는 어디입니까?

황교안 : 수사 중입니다.

이상규 : 결성 인원은 몇 명입니까?

황교안 : 수사 중입니다.

아는 것이 없는 법무장관

“체포동의인] 반대는 대놓고 종북, 기권도 사실상 종북, 무효는 은근슬쩍 종북”

새누리당 김진태

“북한에 좀더 관대한 것이 성숙된 국민의 척도인양 여기는 ‘유행성 북한병’”

〈조선일보〉고문 김대중

“선거도 끝나고 이제는 흔적만 남았네요. 김하영 씨 덕분에 선거 결과를 편히 지켜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국정원 전 심리전담당 민병주가 '김 작원'에게 대선 다음 날 보낸 문자

“빨갱이 전교조는 체벌금지로 대한민국의 혼란을 획책하고 있는 거예요 … 그래야 적화통일이 가까워지니까요.”

국정원 직원으로 밝혀진 '좌익호수'의 댓글 중

“광화문에 50만 명 모이면 … 이석기 패들이 총 들고 파출소, 방송사 습격해, 내전을 유발하는 거죠.”

‘오버’하는 변화재

“박근혜 하야 주장하면 총으로 쏘 버리겠다.”

부산역 촛불집회에서 총기를 들고 협박한 우익

“무자식이 상팔자여”는 존속살해음모죄, ‘마누라가 웬수여’는 배우자살해음모죄?”

한 네티즌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격주 월요일 (다음호 가판은 9월 30일)	
서울 건대입구역 4번 출구 19:00~20:00	울산 현대차 4공장 구 정문 건너편 14:30~15:30
격주 화요일 (다음호 가판은 10월 1일)	
서울 강남역 11번 출구 19:00~20:00	서울 혜화역 4번 출구 19:00~20:00
서울 홍대입구역 8번 출구 19:00~20:00	수원역 롯데리아 앞 광장 19:00~20:00
인천 신세계백화점 건너편(오아시스빌딩) 19:30~20:30	
격주 수요일 (다음호 가판은 10월 2일)	
서울대병원 후문(혜화역 3번 출구) 8:00~9:00	
격주 목요일 (다음호 가판은 10월 3일)	
울산 성남동 젊음의 거리 중부소방서 옆 19:00~20:00	
대학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10월 1,2일)	
국민대(북악) 법학관 1층 식당 앞 화요일 12:00~13:00	이화여대 포스코관 지하층 입구 앞 화요일 12:30~13:30
고려대(안암) 정경대 후문 화요일 16:30~17:30	충남대 공대2호관 앞(쪽문) 수요일 11:45~12:45
서점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서울 : 그날이 오면(서울대 앞), 인사절(건국대 앞), 풀무질(성균관대 앞), 이음책방(대학로),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응암동)	
울산 : 동방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무상보육 약속 내팽개친 박근혜

‘영·유아 보육·육아의 국가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당선한 박근혜 정부가 무상보육 재정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면서 무상보육이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러나 무상보육 재정 고갈은 이미 예정돼 있던 것으로 새누리당이 10개월째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무상보육 공약 뒤집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재정 문제만이 아니다. 정부는 보편적 복지를 거부하고, 육아의 책임이 가정과 여성에게 있는 것임을 확실히 하겠다는 이념 공격도 하고 있다. 서울시가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라고 했을 뿐인데도 새누리당은 이를 선관위에 고발하기도 했다.

양육수당(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에게 수당을 주는 것)도 시작부터 재정고갈이 예고됐다. 이 역시 중앙정부가 재정을 확보하지 않고 지자체에 그 책임을 떠넘겼기 때문이다. 양육수당으로 무상보육을 대체하려 하는 정부 정책 탓에 보육현장에서는 교사들이 무자비하게 해고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여성이 육아에 발목 잡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는 완전히 외면하고 보육 책임을 개인과 기업에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는데, 직장어린이집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한계가 크다. 게다가 이를 계기로 보육수당(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폐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무상보육을 철회할 수 없었던 것은 보육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매우 강했고, 저출산 문제와 육아 비용 스트레스가 정말 심각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보육을 책임질 때 나야지는 것은 단지 비용만이 아니다. 공격재원이 투입된 덕분에 보육현장의 많은 문제들이 폭로되고 있다. 이는 보육이라는 공공재가 그동안 시장화돼 얼마나 많은 부조리들을 양산했는지 보여줬다.

보육의 해묵은 문제들을 건어내고 보육이 진짜 보육다워지는 길은 무상보육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크게 늘린 탓에 교육이 수익성 사업으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어린이집이 돈벌이 판으로 돼 버린 것은 여전히 공공성 기반 없이 보육료만 지원해 왔기 때문이다.

무상보육은 계속돼야 한다. 더 나아가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폭 늘려 양질의 보육이 이뤄져야 한다.

심선혜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박근혜는 지난 대선 때 국정원 시켜 댓글만 단 게 아니라 거짓말도 했던 것이다.

영리병원 허용 기회를 노리는 박근혜

8월 22일 제주도에 설립 승인을 예고한 중국계 영리병원 '싼알병원'의 승인이 잠정 보류됐다. 국내 1호 영리병원 승인이 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온 지 불과 하루 만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완해야 할 점 때문에 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영리병원에 대한 반발 여론을 의식했을 것이다. 특히 국정원 촛불이 켜지고 있는 상황도 신경쓰였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의료관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설립이 지지부진하자, 의료관광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미 병원이나 보험회사가 메디텔(의료호텔)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과 보험회사에게 외국인 환자 유치·알선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가뜰이나 돈벌이에 혈안이 된 병원에 영리성 부대사업의 물꼬를 터주는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 환자로 대상을 한정한다고 했지만, 메디텔을 매개로 병원과 보험회사가 계약을 맺고 국내 환자를 유치·알선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메디텔은 국내 환자도 숙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별써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



건강이 사고파는 것이 되면 이 사회는 부자만 건강한 세상이 될 것이다.

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2017년까지 전국 10곳에 '의료관광 클러스터'를 지정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리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구상을 발표했다.

의료관광

최근 대구에서는 미국 마이애미대학 병원과 손잡고 영리병원을 세우는 방안이 논의됐고, 국토교통부와 대전시를 비롯한 5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러시아 환자를 유치하려고 모스크바와 사할린에 거점을 마련했다.

의료관광은 외국 환자 국내 환자 가리지 않고 그 자체로 문제투성이다. 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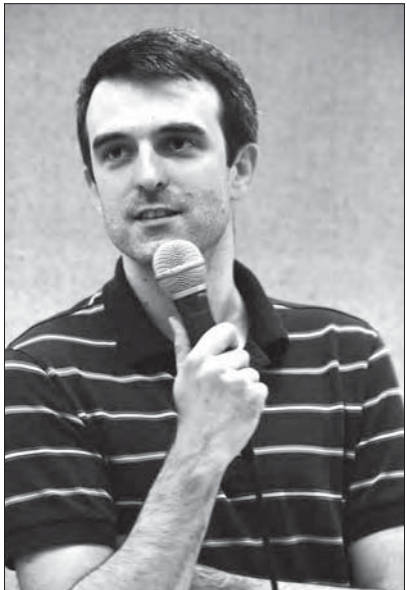
기세포치료, 수(水)치료, 스파테라피와 같이 비공인·비필수 의료가 주된 방식이고 이는 곧 의료의 질 하락과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제주도 '싼알병원'의 승인이 잠정 보류됐지만, 보건복지부는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을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허용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내 의료관광을 비롯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 할 것이다.

철도를 비롯한 다른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투쟁과 연결시키며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에 맞서야 한다.

채민석

“마녀사냥에 반대해 국제적 연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오언 밀러 런던대학교 아시아-아프리카대학 한국학 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당원

통합진보당에 대한 마녀사냥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그런 일을 하고도 남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도 그랬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한국이 갑자기 과거로 회귀한 듯한 느낌이 들고, 국정원이 성장하고 있던 촛불운동을 멈추려고 이런 일을 벌였다는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세계 곳곳에서 한국을 연구하는 많은 교수와 연구자들도 같은 생각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박노자 교수, 찰스 암스트롱

교수(북조선 탄생)의 저자) 등 유럽, 북아메리카, 동남아시아에서 학자 60명 정도가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 중 다수가 한국 국가의 시도, 즉 반대 의견을 질식시키려 하는 것에 확고히 반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는 이석기 의원의 정치에 동의하냐 마냐 하

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석기 의원 탄압은 한국 좌파 전체를 공격하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라는 원칙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서명을 모을 것이고, 한국과 외국 언론에 성명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번역 차승일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국정원 정치공작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집중 촛불대회

9월 13일(금) 오후 7시 | 서울시장 광장

주최 : 국정원 정치공작 대산개입 진상 및 축소 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서국회의



탄압 광풍으로 우리를 위축·분열시키려는 박근혜

김지윤

▶ 1면에서 이어짐

지금까지 제시된 증거는 짜깁기가 의심되는 녹취록 정도뿐이다. RO(혁명조직)라는 이름도 어설프지만 국정원은 RO가 언제 결성됐는지, 강령과 규약, 조직 체계가 무엇인지 하나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수많은 법률전문가들이 이 사건은 도저히 “국토를 잠점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모의”한 ‘내란음모’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마녀사냥의 배경과 의도

일부 사람들은 박근혜가 궁지에 몰려서 반격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촛불운동은 아직 그 정도로 강력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또 박근혜 정권도 내부에서 분열과 마비가 일어나는 정치 위기였다고 보기 힘들다. 이런 분석은 정세를 냉정하게 보지 못함으로써 올바른 전술을 내놓기 어렵게 한다.

그보다 이번 사태는 박근혜 정권이 하반기 정국 운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고자 시도한 공격으로 봐야 한다. 권위주의적 강성 우익 정권답게 말이다. 국정조사의 성과없는 마무리 이후 촛불이 주춤한 틈을 이용했을 것이다.

마녀사냥은 애꿎은 희생양을 만들며 국면을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미 뉴스에서 국정원 게이트는 자취를 감췄다. 친민주당 NGO들과 진보 단체들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유리한 입지를 만들어 두려는 포석도 보인다.

무엇보다 마녀사냥은 하반기에 경제

이 때문에 국정원은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함께 끼워 넣으며 퇴로를 열어둔 듯하다. 단지 머릿속의 사상과 주장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현대의 악법을 이용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면 결코 이 마녀사냥에 동조할 수 없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것은 표현도 하지 않고 자신들끼리 비공개로 토론한 것일 뿐이다. 도대체 ‘토론의 자유’도 없는 게 민주주의 사회인가.

위기 고통전가를 본격화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박근혜는 하반기 목표를 ‘경제활성화’로 내걸고 재벌 퍼주기, 노동자 쥐어짜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정원이 내란음모 카드를 꺼내던 날, 박근혜는 재벌들을 만나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철도 민영화뿐 아니라 국민연금 개악, 전기요금 인상, 무상보육 후퇴 등도 야금야금 추진되고 있다.

마녀사냥은 이런 공격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는 ‘미스터 국가보안법’ 황교안을 일찌감치 법무부 장관에 앉혔고, 최근에는 마녀사냥의 대가 김기춘을 비서실장에 앉혔다.

이런 시도를 통해 박근혜 정권은 진보운동을 이간질해 각개격파하려 한다. 내년 지방선거 등에서 야권연대가 가능성도 조기에 차단시킬 의도일 것이다. 새누리당 하태경은 “지방선거에서는 통합진보당과 단일화하지 않는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내란 음모’ 탄압이 박근혜의 ‘신의 한 수’가 되게 놔둬선 안 된다 9월 5일 이석기 의원이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 구치소로 끌려가고 있다.

어떻게 맞설 것인가

체포동의안 통과 이후 우파들은 기세를 높이고 있다. 조중동은 기권, 반대표를 던진 게 누구냐며 “중복의 씨앗까지 정리해야”한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다.

우파는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 박탈과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을 주장하며 이후 시나리오를 예고했다. <조선일보>는 “이번 사건 연루자 중 상당수가 좌파 단체의 주요 간부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며 마녀사냥 확대를 주장한다.

실제로 국정원은 21세기한국대학생 연합 간부들이 ‘RO’ 모임에 참석했다며 수사에 나섰다. 반값등록금 운동에 앞장 선 학생 활동가들을 겨냥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노총이 “통합진보당

의 배후”이며 “좌익노조”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울산시당은 “울산은 체제전복 세력인 통합진보당의 아지트”라며 공격하고 있다.

앞서, 철도노조 내 의견그룹인 ‘한길자주회’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바 있다.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의 예봉을 꺾고자 마녀사냥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다.

원세훈이 “내부의 적”으로 규정했던 전교조에 대한 공격도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진영의 일부가 ‘양비론’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양비론은 진정한 적을 가릴 뿐이다.

온갖 불법과 부패, 비리의 몸통인 국정원과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이 이석

기 의원을 처벌할 자격은 없다. 이들이 야말로 5.16쿠데타와 광주항쟁을 짓밟는 ‘내란’으로 권력을 잡은 정권의 후예들 아닌가.

진정한 위협

최근에도 이들은 박근혜 당선을 위해 물불 안 가리며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이런 자들과 피억압·피착취 운동의 일부인 통합진보당이 똑같이 문제라고 봐서는 안 된다.

국정원 게이트를 저지르고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는 집단과 그것에 항의해서 어제까지 우리와 함께 촛불을 든 세력 사이에 누가 우리의 진정한 위협이겠는가?

통합진보당도 탄압에 함께 맞서고 있는 단체들에게까지 솔직하지 못하거나 말을 바꾸는 태도를 보이지 말아야 한다. 이런 태도는 우리 편을 불편하게 만들며, 방어를 넓히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농담이었다’는 식으로 넘기려 하거나 말바꾸기를 거듭하면 우리 편의 자신감만 떨어질 수 있다.

진보당이 국정원 규탄 시국회의 내에서 공안탄압에 흔들리는 친민주당 NGO 등을 따끔하게 비판하며 적극적인 방어를 호소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의원까지 보유한 입지를 이용해서 더 당당하게 자신들의 반제국주의 주장과 정당성을 밝히며 탄압에 맞서야 한다. 이런 사상과 토론 자체를 범죄시

하는 게 무슨 민주주의냐고 신랄하게 폭로하면서 말이다.

독일 법학자 라트브루히는 ‘악법에 복종하는 것은 범죄 행위’라고 했다. 사회 진보와 변혁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은 일관되게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한다.

정치적 입장 차이를 떠나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모든 세력들이 힘을 합쳐 마녀사냥에 맞서야 한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국가 탄압에 침묵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기회주의다.

저들의 공격을 단결해서 막아 내야 하반기에 다가올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투쟁에서도 힘있게 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내란죄’가 저들의 새로운 무기가 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의 지배자들은 정권·체제 반대 세력을 공격하는 데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왔다. 이 법 때문에 수많은 노동운동가, 학생운동가, 지식인들이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이유로 고초를 겪어 왔다.

그런데 이번에 국정원은 통합진보당을 공격하면서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형법의 내란죄 혐의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로써 저들은 국가보안법을 앞세웠다면 얻기 어려웠을 효과를 거두고 있

다. 사상의 자유 탄압이라는 논란을 피하며 “충격과 공포” 속에 진보진영을 고립·분열시키고 있는 것이다.

내란의 ‘예비·음모·선동·선전’의 죄는 1953년에 형법을 처음 만들면서 기존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되 그 기능을 그대로 옮겨 놓으려고 만든 조항이다. 특히, 내란 선동·선전의 죄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처럼 사상을 처벌하는 위험천만한 독소 조항이다. 법무장관 황교안도 4일 국회에 나와서

“[내란 음모죄는] 실행계획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모의할 필요는 없다… [선동죄는] 내란에 대해 고무적 자극을 주는 일체의 언동”이라고 설명했다.

내란죄의 예비·음모·선전·선동의 죄로도 얼마든지 사상과 표현의 자유, 노동계급 정치조직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박정희와 전두환이 이승만이 만든 국가보안법을 계승·발전시키면서도 거듭 내란음모죄를 이용해 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지배자들은 1991년에 국가보안법을 개악하면서 ‘친북’과 관계 없는 좌파까지 탄압할 수 있도록 “국가 변란 선전·선동” 개념을 추가한 바 있다. 그런데 황교안은 내란죄의 “국헌 문란” 개념은 국가보안법의 “국가 변란” 개념보다 더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그동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되 형법으로 보완하거나 대체 가능하다고 했던 자유주의·개혁주의 논리가 왜 틀려먹었는지도 보여 준다. 이들 중 상

당수가 마녀사냥에 무릎 꿇어 온 것도 그 방증이다.

이번 탄압이 성공을 거둔다면, 저들은 새로운 ‘탄압 무기’를 33년 만에 다시 확보하는 셈이다. 북한과 연계가 없거나 북한 체제를 반대하지만 자본주의 체제와 국가기구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좌파들까지 언제든지 공격하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운동과 진보진영은 이런 방향으로 물꼬를 트려는 저들의 추악한 시도를 반드시 단결해서 막아 내야 한다.

역사에서 배우기

광기 어린 마녀사냥으로 얼룩진 역사와 교훈

독재 정권 치하 한국은 일상적 마녀사냥으로 유지된 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조봉암, 인혁당, 민청학련, 남민전 등 수많은 공안 사건과 각종 간첩단 사건이 있었다. 심지어 김대중 같은 부르주아 정치인들까지 그 희생자가 됐다.

사형당한 인혁당 사건 희생자의 어린 자녀가 또래 아이들의 ‘빨갱이 총살 놀이’ 대상이 됐을 정도로 마녀사냥의 광기는 혹심했다.

사실, 한국 정부 자체가 제주도 4·3 항쟁 당시 3~4만 명을 학살한 “빨갱이 사냥”을 통해 건설된 국가였다.

한국에서 마녀사냥은 주로 북한을 매개로 했다. 당시 진보진영 안에는 극악한 독재와 제국주의 압력에 맞서고 민족 통일을 이루려면 (정도는 다를지라도) 북한과 연대할 수도 있다는 정서가 많았다.

이에 따라 희생양을 찾기는 어렵지 않았다. 사소한 대북 연계 혐의를 적당히 부풀리면 됐다. 몇 년 전 ‘일심회’ 사건 등이 그랬듯이, 많은 간첩단 사건이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독재 정권 시절 마녀사냥은 종종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이었다. 예를 들어, 이승만은 자신의 장기 집권이 불투명해 보이자, 당시 최대의 경쟁자로 급부상한 조봉암과 그의 진보당을 마녀사냥의 제물로 삼았다.

진보당은 서유럽식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며 평화통일을 주장했다. 그런데도 1958년 이승만 정권은 그가 북한의 간첩과 접선했다 정치자금 받고 공산주의자들을 국회에 당선시켰다고 날조했다. 그리고는 조봉암을 처형하고 진보당을 해산시켰다.

당시 민주당과 일부 혁신계 인사도 조봉암 마녀사냥에 동참했다. 특히 진보당에서 분당해 나간 민주혁신당 서상일은 재판에 검찰측 증인으로 나와 “진보당은 유물사관에 입각한 좌익 정당”이라며 검찰을 거들었다. 결국 마녀사냥 덕분에 이승만은 장기 집권을 획책하는 대규모 부정선거를 저지를 수 있었다.

마녀사냥은 더욱 폭넓은 사회통제 수단으로도 활용됐다. 심지어 박정희 독재 시절, 억압받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려 했던 종교계도 마녀사냥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도시산업선교회는 좌파적 사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음에도 용공으로 내몰렸다. 노동조합 결성 등 노동자 권리 신장이 초창기에 기반한 자본 축적에 방해가 됐기 때문이다.

또한, 오늘날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배자들은 저항세력 일부의 ‘자극적 주장’을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 마녀사냥의 효과를 극대화하려 했다. 예를 들어, 1979년 박정희 정권은



숙죄양 삼기는 지배자들의 단골 카드다 2012년 9월 12일 인혁당 사건 유가족들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의 ‘사법살인’ 부정 발언에 오열하고 있다.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이 도시 게릴라 전략에 따라 체제를 타도하려 했으며 그 ‘폭력성’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그러나 정작 남민전이 입수한 무기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훔친 총알도 없는 소총 한 자루였다. 그들의 실질적인 활동은 유신 독재와 YH 여성 노동자 탄압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살포한 것 정도였다.

남민전에 대한 공포심을 극대화한 공안 당국의 술책과 언론의 원색적 보도는 의도한 효과를 보기도 했다. 당시 재야운동의 일부는 남민전 사건 희생자들을 방어하길 꺼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마녀사냥의 진정한 목적은 YH사건과 부마항쟁으로 인한 정권 최대의 위기를 무마하고자 한 것이었다.

‘빨갱이’

목전의 대중적 저항운동을 마녀사냥으로 침묵시키려 한 시도는 박정희 정권 때만이 아니었다. 노태우 정권 시기 1991년 5월 투쟁 와중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이 벌어졌고, 2008년 촛불시위 때도 원정화 간첩 사건을 만들어 국면 전환을 시도한 바 있다.

마녀사냥은 독재 정권 치하에서만 벌어진 것은 아니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반(半)권위주의나 자유주의 정권 역시 마녀사냥을 종종 이용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직후 김영삼은 대대적인 ‘주사파’ 색출 소동을 벌였다. 사노맹을 ‘주사파’의 배후로 지목해 수많은 운동권의 실소를 자아낸 서강대 총장 박홍의 발언이 신호탄이었다.

‘주사파’ 색출 소동의 표적은 단지 주사파에만 국한하지 않았다. 주류 정치계, 언론계, 학계, 노동운동 전반으로 확대돼 갔다.

북한을 사회주의가 아닌 국가자본주의로 보는 국제사회주의자들(IS)도 대대적인 탄압을 받았다. 심지어 국립 경성대학교수들이 퍼낸 학술 교재도 마녀재판의 대상이 됐다. 대학에서는 학사관리가 엄격해지고 학생자치권이 공격당했다.

심지어 서강대에서는 신입생들이 운동권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써야 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군대와 청와대에도 주사파와 간첩이 있다며 한술 더 뜨기도 했다.

1998년 김대중 정권이 터뜨린 영남위원회 사건은 IMF 구조조정에 맞선 울산지역 조직노동운동을 직접 겨냥한 것이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의 ‘일심회’ 마녀사냥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우익들의 분노를 달래는 동시에, 진보정당의 성장을 저지하고 그 성격을 지배계급의 입맛에 맞게 온건화시키겠다는 것이었다.

한국에서 벌어진 마녀사냥의 역사에서 배울 교훈이 있다.

먼저, 마녀사냥이 벌어질 때마다 민주

당 등 자유주의 야당은 사태의 불똥이 자신들에게 튕겨와 전전긍긍했다. 결국 그들의 해결책은 마녀사냥에 동참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주류 지배자들에게 자신들도 이 체제를 힘써 지키려는 세력임을 입증받고자 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과제는 주로 ‘용공 좌익’ 즉 ‘마녀’들에게 주어졌다.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그나마의 민주주의는 바로 이런 ‘마녀’들의 희생과 고투로 이뤄진 것이다.

둘째, 마녀사냥이 대체로 그렇듯이, 기존의 ‘상식’과 ‘여론’에 위배된다고 간주되는 소수와 집단이 손쉬운 희생양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과 ‘여론’을 빌미로 희생자들을 경원시하는 것은 사실상 마녀사냥에 동참하는 일이 된다.

지배자들은 대중의 ‘상식’과 ‘여론’에 호소해 마녀사냥을 정당화하지만, 그들이 노리는 진짜 목표는 자신들의 기득권 체제를 유지하고 대중을 위축시켜 지배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마녀소동에서 이석기 의원을 조롱하거나, 빌미를 줬다고 비난하며, 덩달아 마녀재판관 노릇을 하는 자유주의 지식인과 일부 진보 인사들의 행위는 무지하거나 비열하기 짝이 없는 행위다.

한규한

경성대학교대학원 정치경제학과 역사사상학과 교수

기성 언론 — 마녀사냥의 흉측한 앞잡이

마녀사냥 속에서 기성 언론의 흉측한 구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TV를 끄고, 신문을 덮고 싶을 정도다.

가장 신난 것은 조중동과 종편이다. 이들은 물만난 고기처럼 온갖 역겨운 기사들을 쏟아 내고 있다.

‘이민위천’ 글씨가 이석기 의원 집에 걸려 있는 것도 마녀사냥의 근거가 됐다. 2008년 한나라당의 대표 강재섭도 말한 문구인데 말이다. 운동 가요를 부른 것도, “제국주의”나 “혁명”이라는 단어를 쓴 것도 마녀사냥의 근거가 되고 있다.

언론의 자유

〈동아일보〉는 “대법원이 이적단체 등으로 확정 판결을 해도 강제 해산시킬 수 없는 제도적 허점도 메워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강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경제〉는 심지어 “좌경화 경쟁해 온 새누리당도 책임 크다”는 주장까지 내놔다.

이 모든 것은 자본주의에서 기성 언론이 말해 온 ‘언론의 자유’가 1퍼센트 지배자들이 억압·폭력을 휘두를 자유일 뿐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친민주당적 성향인 자유주의 언론들의 보도도 눈꼴시다.

〈한겨레〉는 “낡은 세력의 충돌”이라며 양비론을 편다. 심지어 〈한겨레〉는 “체포동의안 가결을 더욱 부채질한 것은 통합진보당 자신”이라고까지 했다. 〈경향신문〉은 “국회에 입성하고도 수구적 행태를 보인 세력은 더 이상 진보를 참칭할 자격이 없다”며 목에 힘줄을 세웠다.

박근혜 정권과 우파들이 벌이고 있는 위선과 광기를 폭로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진보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언론이 해야 할 일이다.

김문성

김지윤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주의, 개혁을 제한하는 개혁주의

민주당이 마녀사냥에 굴복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

우파에게 굴복하는 게 이당의 특징이자 전통이기 때문이다. ‘귀태’ 발언 때도 민주당은 대변인 홍익표를 스스로 쫓아냈다.

민주당은 최근 우파의 눈치를 보며 아예 당 로고와 상징색도 한나라당이 쓰다 버린 파란색으로 바꾸었다.

한심한 것은 민주당을 바꾸겠다고 그 당에 들어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출신 정치인들이다.

이들은 굴복 흐름에 저항하기는커녕 순순히 함께하고 있다.

간만 보다가 거품이 꺼지고 있는 안철수의 한심한 행태와 함께 친민주당 자유주의 언론들의 태도도 불쌍스럽다. 〈한겨

레〉, 〈경향신문〉 등은 “사실이라면 총격이다”, “의원직을 사퇴하라”, “수사에 협조하라” 하며 마녀사냥에 타협하고 있다.

이런 민주당과 자유주의 언론을 보면서 박근혜와 국정원은 즐거워하고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와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이런 한심한 태도는 부르주아지와 연계를 맺고 있는 친자본주의적 정치세력의 한계를 보여 준다.

분노스러운 것은 진보정당이라는 정의당도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며 마녀사냥 광풍에 굴복한 점이다.

참여정부 출신 정의당 대표 천호선은 역겨운 본색을 드러냈고, 심상정 의원까지 “헌법 밖의 진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

이라며 이를 정당화했다. 심상정 의원은 “헌법이 악법이었어서 도전하겠다고 한다면 국회의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국가권력이 인정하는 사상만 허용하고, 체제를 변혁하려는 사상의 자유를 부인한다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라 부를 수도 없다.

이정미 대변인은 체포동의안 찬성이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다하라는” 취지라고도 했다. 무소불위의 국정원에게 현역 의원이 끌려가 갇히는 것이 어떻게 “정치적 책임”이라는 말인가.

정의당은 지배계급에게 자신들이 현 체제에 도전할 의사가 없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다. 낡은 체제를 벗어나는 ‘헌법 밖 진보’와 분명히 선을 긋겠다는 총성 선언이기도 하다.

이런 자제니 그동안 ‘박근혜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노동자 증세를 해야 한다’ 등 번짚수 없는 주장도 해 온 것이다.

정의당의 이런 개혁주의는 개혁을 이루는 데서도 무능할 수밖에 없다. 체제가 허용하는 틀 내에서만 움직이기에 기성 체제에 부담이 되는 투쟁과 권리를 일관되게 옹호하기 힘들다.

진보는 헌법이 아니라 이 사회의 근본 분단선인 계급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경제위기 고통전가를 막아내려면 노동계급의 대중투쟁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 체제의 우선순위에 도전하는 사상과 표현, 결사의 자유가 필요하다.

독재·제국주의를 찬양하는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광범하게 벌이자

김현옥 전교조 역사교사

8월 말,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이 집필한 교회사 한국사 교과서가 최종 검정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반발해 전교조를 포함해 광주시교육청,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야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검정 합격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는 “근로정신대와 위안부를 구분하지 못하고, 친일로 판명난 <동아일보> 설립자 김성수를 항일 인사로 되살리고, 쿠데타와 유신을 정당화”하는 교회사 한국사 교과서의 학교 배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뉴라이트는 기존 역사교과서를 ‘민중사관’, ‘남로당식 사관’, ‘좌편향’으로 낙인찍어 왔다. 뉴라이트는 이승만과 박정희를 각각 ‘건국의 아버지’, ‘산업화의 아버지’ 따위로 미화하며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고 주장해 왔다.

역사전쟁

그러나 언론·출판의 자유조차 인정하지 않은 독재체제를 ‘자유민주주의’라고 위선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현대사에서 기득권을 누리 온 세력들한테 정당성을 부여”(한홍구 교수)하는 정치적 시도다.

교회사 한국사 교과서는 친일파와 연합한 이승만을 “국민적 영웅”으로 추켜올리고 있다. 광복 이후를 서술한 대목에서는 미국 제국주의 억압의 역사도 부정한다.

뉴라이트 등 우익은 자신을 입맛대로 역사를 왜곡하는 ‘역사전쟁’을 끊임없이 시도해 왔다. 서울대 교수 박효종은 2005년에 ‘교과서포럼’을 만들었고 2008년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를 발간해 이데올로기 투쟁을 전개했다.

그리고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를 ‘좌편향’ 교과서로 낙인찍고 내용을 수정케 만들었다. 이 자는 박근혜의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정부분과 간사를 맡기도 했다.

박근혜는 2008년 교과서포럼의 대안 교과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필자들에게 “후손들을 위해 큰일을 하셨다”고 칭찬했다. 교과서포럼의 대안교과서가 박정희의 10월 유신을 합리화했기 때문이다.

이번 교회사 한국사 교과서도 박정희

의 5·16쿠데타를 합리화하고 10월 유신을 “북한의 남한 공산화 시도로 인한 긴박한 분위기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그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친일파를 옹호하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것은 교회사 한국사 교과서 저자들이 식민지 근대화론의 관점에 서 있기 때문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식민지 시대가 ‘시장경제’의 초석을 놓고, 근대화의 토대를 닦은 시기”라며 제국주의를 미화한다. 이 논리는 해방 후 한반도 남쪽에 형성된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5·16쿠데타를 ‘근대화 혁명’으로, 박정희를 ‘산업화의 아버지’로 미화하는 논리의 기초를 마련했다.

과거 일본에서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는 호수샤 교과서가 나왔을 때, 일본의 역사교사들과 양심적 시민단체들이 합심해 채택률을 0.01퍼센트 미만으로 그치게 한 적이 있다.

전교조 등 진보단체들은 교회사 한국사 교과서가 채택되지 못하도록 광범하게 불채택 운동을 펼쳐야 한다.

왜곡된 우파 역사관 강요하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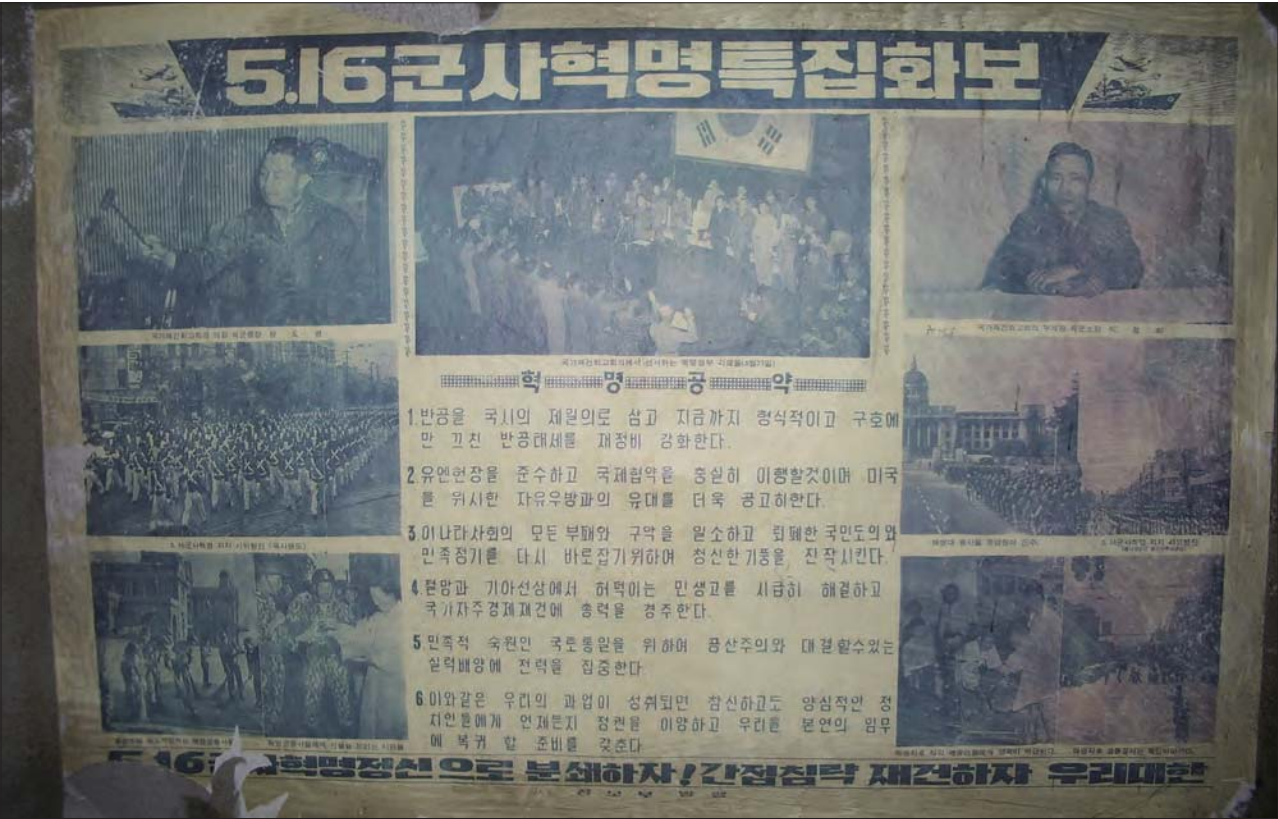
한국사 수능 필수화 반대한다

8월 29일 교육부는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를 수능시험에서 별도의 영역 시험으로 필수화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사가 수능에 딱 들어가면 깨끗하게 끝나는 일”이라는 박근혜의 말로 촉발된 이 방안으로 사회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논쟁은 자칫, 교과 간의 이해 다툼과 현 수능체제를 바라보는 입장차에 따른 해법 논쟁으로 비춰지고 있다. 국영수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소외감을 맛봐야 했던 역사교사들은 이 문제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전교조는 8월 1일자 성명서에서 국가가 역사교육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라며 분명히 반대했으나, 최근에는



쿠데타, 독재를 역사의 박물관에서 꺼내려는 우파 과거를 왜곡해 현재도 왜곡하려 한다. 수도권산 달동네 박물관.

여러 압력에 밀려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한국사 수능 필수화를 분명하게 반대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편협된 자기 생각을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굉장히 위험하다”며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유신체제를 옹호해 온 박근혜가 무엇을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역사’라고 할 것인가? 모든 나라에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역사 인식은 매우 상이한데, 현대사 영역에서는 특히 그렇다. 계급갈등이 첨예한 사회에서 중립적 역사교육이란 있을 수 없다.

박근혜는 6·25전쟁을 ‘북침’이라고 응답한 조사 결과를 두고도 “교육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 주는 단면”이라며 역사교사들을 비난했다. 최근 여러 차례 현장교사들의 ‘역사왜곡’ 문제를 지적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사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 아니겠는가?

박근혜 정부는 국가주의를 부추기면서 학교교육에 대한 이데올로기 통제를 강화하려 할 것이다.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계급과 민중에 전가하는 데 ‘외국의 경쟁자에 맞서 모든 국민이 합심해야 한다’는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는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이다.

역사교사들도 세계사는 빼고 한국사만을 강조하는 것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박정희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내세우

며 유신 정치 시대를 열었고, 이를 정당화하려고 1974년 국사 과목을 국정화*한 바 있다. 지금 러시아에서는 대통령 푸틴이 주도해 검정이던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가 심사를 통과한 상황에서 한국사가 수능에서 필수가 되면, 박근혜가 의도하는 한국사 교육이 이뤄질 것이다. 한국사 수능 필수를 분명하게 반대해야 한다.



국정화
정부가 만든 단일 교과서로 전국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하는 것.

국정원 게이트 항의 운동

촛불은 마녀사냥 앞에서 갈라지지 말아야 한다

지난 석 달여 과정은 국정원 규탄 촛불운동의 가능성과 더불어 한계와 약점도 보여 줬다.

우선, 강성 우파인 박근혜 정부를 임기 첫 해부터 궁지로 몰기에는 운동의 규모와 폭이 아직은 충분치 않다. 박근혜 지지율도 크게 낮아지진 않고 있다. 이명박은 2008년 촛불항쟁이 1백만 명 규모로 성장하면서 지지율이 7퍼센트 대로 급락한 바 있다.

물론 박근혜의 복지와 경제민주화 공약 철회, 노동자 지갑에서 돈 꺼내 부자와 재벌을 도우려는 세제개편 사기극, 전월세 대책 사기극에 대한 분노가 물밑에서 자라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불만을 더 키우고 거리로 끌어내려면 촛불운동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총체적 불만의 결집점이 돼야 했다. 실제로 철도 민영화, 쌍용차 해고, 비정규직, 진주의료원, 공무원노조 등 다양한 의제들이 촛불 속에서 환영받았다.

그런데 이 촛불운동을 이끌어 온 국정원 대선개입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의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이런 과제 수행을 한사코 꺼려 왔다.

운동에 참가하는 대중의 자발성도 아직은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통제력을 넘어서는 정도가 아니다. 이런 한계 속에서 시국회의의 내 NGO 지도자들은 촛불운동이 민주당이 설정한 한계와 틀을 넘지 못하도록 통제하려 해 왔다.

문제는 이런 방향을 통합진보당이나 한국진보연대 등 시국회의의 내 주요 노동·민중운동 단체들도 묵인·동조해 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들 역시 최근 수년간 계급연합 전략에 기초해 야권연대 노선을 추구해 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NGO 지도자들을 뒤따르며 민주당과 보조를 맞추는데 중점을 뒀다.

이런 한계와 약점 때문에 촛불운동은 국정조사 마무리 이후에 방향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내란

음모 사건’을 국정원이 터트린 것이다.

개혁·해체의 대상으로 지목된 국정원을 전면으로 내세워 탄압을 벌이는 것은 이 정권의 뱃속 깊은 반동 DNA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촛불운동의 약점과 틀을 겨냥한 것이기도 할 것이다.

거리 두기

이런 상황에서 촛불운동이 해야 할 일은 이런 박근혜의 반동적 도발에 반대해 단결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탄압에 대한 대응 문제에서 촛불운동은 분열해 있다.

많은 이들이 ‘범죄집단 국정원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는 올바른 입장을 취한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진보당 때문에 우리까지 종북·내란 동조 세력으로 매도당하게 생겼다’며 진보당을 촛불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진짜 문제는 시국회의의 지도자들이다. NGO 지도자들은 이 사건과 어떻게든 거리를 두려고 한다. 시국

회의가 공안탄압 반대 입장을 채택하는 것마저 부담스러워했다.

‘통합진보당 탄압 견과 촛불운동의 국정원 개혁 요구는 별개’라며 이와 무관하게 촛불을 계속 들자는 주장도 편다.

이처럼 공안탄압 반대를 회피하는 논리는 의도가 무엇이든 스스로 운동의 정당성을 허물고 자기 발등을 찌는 것이다.

국정원의 공안탄압에 침묵하거나 그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은 국정원의 국내 수사권을 폐지하라고 요구해 온 그동안의 주장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 공작이 “정당한 대북심리전”이라는 저들의 억지도 제대로 반박하기 어려워진다.

무엇보다 이런 탄압에 맞서길 회피해버리면 ‘어떤 사상·단체는 안 된다’는 자기 검열이 운동 안에 자리잡게 된다. 그러면 운동은 더 사분오열할 수밖에 없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저들은 진보당과의 연관을 빌미로

철도노조, 전교조 등으로 탄압을 확대하려 할 것이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다른 진보정당들과 박원순 등으로도 마녀사냥을 확대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시국회의는 국정원의 공안탄압에 반대하며 촛불운동 참가자들을 이 방향으로 단결시켜야 한다.

국정원이 중심이 된 저들의 총체적 정치 공작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므로 국정원 게이트를 규탄해 온 촛불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사상과 토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운동의 애초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나와 다르고 잘못된 사상이더라도 그 자유는 옹호돼야 한다.

더불어 촛불운동은 정점을 확대해 박근혜의 온갖 반동적 정책에 맞서는 더 많은 사회세력과 함께하려고 해서 저들의 고립·분열·약화 시도에 맞서야 한다.

김문성

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

성취한 것과 쟁취해야 할 것

8월 20일에 시작된 현대차 부분파업, 산업거부, 주말특근 거부로 현대차 사측은 1조 2백25억 원의 손실이 생겼다고 집계했다. 경제 위기와 “귀족노조”라는 이데올로기 공세 속에서도 현대차 노동자들이 저력을 보여 준 것이다.

9월 5일에 현대차 사측과 노조 집행부는 임금·단체협상에 잠정합의했다. 합의안 내용을 보면 임금 인상은 지난해에 견줘 좀더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지난해에 임금 타결로 1인당 평균 2천7백여 만 원을 더 받아 내게 됐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성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삭감되고 있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파업과 투쟁으로 임금 인상을 성취한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잠정합의안에는 아쉬운 점이 더 많다. 기본급 대폭 인상이나 정기 상여금 인상 같은 고정적 임금의 인상은 불충분하다. 현대차 노동자들은 기본급을 대폭 인상해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고 싶어한다. 성과급으로 일시적으로 임금을 올릴 수 있지만, 현대차 경영 실적에 연동되므로 불안정하다.

저력

그리고 노조 집행부는 정년 연장 요구를 철회했다. 현대차 사측은 노조의 정년 연장 요구를 “생떼 쓰기”라고 비난하며 끝까지 수용을 거부했다. 그러나 퇴직 이후 국민연금으로 생활하기도 어렵고, 복지 제도로 불충분한 상황에서 현대차 노동자들의 정년 연장 염원은 정당하다.



사진 제공 현대차 1공장 조합원

주말 특근·손배가압류 등에서 아쉬운 점이 많은 잠정합의안 8월 23일 현대차 울산 1공장 파업 집회.

주말 특근 추가 합의도 무시됐다. 주간연속2교대 도입 이후에 사측이 평일 노동강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주 6일 노동을 고착화하는 것에 반발해, 노동자들은 상반기에 특근 거부 투쟁을 벌였다.

그럼에도 4월 26일 현대차 사측과 문용문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바람을 거슬러 특근 문제를 합의했다. 조합원들의 반발 때문에 이번 임단협 투쟁에서 추가협의를 하기로 했으나, 이번에도 특근 문제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현대차 사측과 문용문 집행부의 합의에 반발해 정당한 투쟁을 했던 1공장 활동가들에 대한 손배가압류 철회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으로도 투쟁에 족쇄를 채우겠다는 심보다.

불충분한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이나 비정규직 처우 개선 관련 내용도 없다. 사측이 불법파견 특별교섭에서 신규채용을 고집하는 상황에서, 정규직 노조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내걸고 투쟁하며 사측을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용문 집행부는 “생산공정과 상시 업무 하도급 금지, 정규직 사용” 요구도 철회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잠정합의안

은 어느 정도 성취한 것도 있지만 조합원들의 핵심 염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잠정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게 옳은 이유다.

잠정합의안이 부결된다면, 노조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설사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더라도, 현대차 노동자들이 쟁취해야 할 과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번 임단협 투쟁에서 보여 준 저력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꾸준히 그 과제들을 추구에 나가야 한다.

▶ 관련 기사 14면
허수영·김지태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은 어디로

9월 4일 열린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대의원회에서 사실상 투쟁을 차기 집행부 선출 이후로 미루는 결정을 했다.

그동안 비정규직지회 지도부는 8월 말까지 특별교섭으로 해결하고, 해결이 안 되면 ‘현장파업’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는데, 그 공언이 무색해졌다.

특별교섭에서 사측이 신규채용을 하겠다는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상황에서 어려운 조건이지만 투쟁이 필요했다. 게다가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단협 파업을 이용해 함께 투쟁할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허수영

보시라이 재판

‘재판 쇼’로 감추지 못한 중국 지배계급의 분열

8월 22~26일 중국의 전 총칭 당서기 보시라이가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는 지난해 총칭 당서기 직위를 박탈당하고 계속 구금돼 있었다.

이 재판은 1981년 4인방 재판* 이후 중국 최대의 정치 재판으로 불리고 있다. 그가 한때 인기 있는 정책들을 펼치며 중국의 최고 지도부 후보로 거론되던 거물 정치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부인의 영국인 사업가 독살 혐의와 측근의 미국 망명 시도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보시라이는 권력에서 축출됐다. 이 과정에서, 1989년 톈안먼 항쟁 이후 가장 심각한 지배층 분열이 드러났다.

중국 지배자들은 보시라이 재판으로, 보시라이 축출의 정당성과 반부패 의지 등을 대중에 보여 주고자 했다.

이번 재판에서 보시라이 일가의 온갖 부패와 비리 혐의가 공개됐다. 보시라이의 아들들은 기업주가 제공한 전용기로 아프리카로 놀러 다녔으며, 아내는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프랑스에 호화 별장을 샀다.

관영 〈인민일보〉는 “이번 재판은 법에 근거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국가주석 시진핑과 지배자들의 의도가 잘 먹혔는지는 의문이다.

공산당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법원이 ‘사법 투명성’을 보여 줬다고 믿는 사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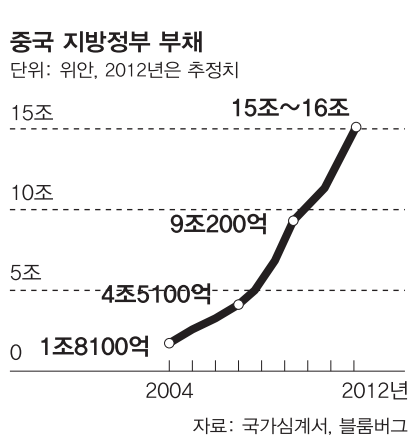
과연 얼마나 많을까. 재판의 주요 내용은 법원이 웨이보(중국판 트위터)로 상세히 공개했지만, 이는 공산당의 검열을 통한 공개였다.

보시라이 가족의 엄청난 부패 실태는 중국 대중에 상당한 실망과 분노를 일으킬 만하다. 그러나 이 분노는 다른 고위 관료들한테도 부메랑이 돼 날아갈 수 있다. 중국에서 부패는 고질적인 문제고, 그 핵심에 공산당 관료들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이번 재판은 “승자가 없는 정치 재판”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위기

중국의 일부 신좌파*는 보시라이가 추진한 경제·사회 정책인 ‘충칭모델’ 때문에 중국 관료들이 그를 제거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보시라이는 시장화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데 진정으로 관심 있는 개혁가가 아니었다.

‘충칭모델’의 핵심은 중국의 번두리 총칭의 성장을 위해 국유기업을 강화하는 데 있었다. 보시라이는 민간 자본과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 데도 열을 올렸다.

충칭시가 추진해 온 대규모 사회기반 시설 투자, 공공주택 건설, 심지어 호구제도 개혁도 민간 자본 유치가 주된 목표였다. 따라서 보시라이와 나머지 고위 관료들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

그럼에도 지금 중국 지배자들이 중국 안팎의 문제들을 놓고 심각한 분열을 겪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세계경제 위기 속에 중국의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제 더는 수출 위주의 고속 성장 모델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해지고 있다.

2008년 경제 위기를 탈출하려고 시작한 대대적 경기부양 정책은 커다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부동산 거품과 지방 부채는 중국이 겪는 심각한 ‘부작용’의 일부일 뿐이다.

이런 와중에 대중의 불만과 저항은 날로 커지고 있다. 아직까지 단일 정점과 자기 지역을 넘지 않는 수준이지만, 언젠는 중앙 정부와 체제 전체를 향해 저항이 터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래서 지배자들이 아랍 혁명의 불씨가 중국으로 옮겨 붙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즉, 중국 자본주의의 모순과 기층 민중의 투쟁·불만으로 현 지배 방식을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층 전반에 확산되면서 이들 사이에 분열이 불거지는 것이다. 보시라이 사태는 이런 분열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따라서 보시라이 재판으로 중국 공산당 내 분열과 갈등이 봉합될 것이라 장담하기 어렵다.

지금 총리 리커창은 국내 소비를 키우려고 금융 규제 완화, 도시화와 호구제도 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요 국유기업들의 개혁에 박차를 가하려 한다.

이런 구상이 관료들의 엇갈리는 이해관계 때문에 순탄하게 진행될지 두고 봐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정치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예컨대 전 정치국 상무위원 저우융캉

과 그 측근들이 지금 숙청 대상으로 거론되는데, 석유 관련 국유기업들을 통제해 온 이들이 표적이 된 것과 시진핑·리커창의 국유기업 개혁이 아무런 상관이 없겠는가.

따라서 앞으로 중국 지배자들 사이에 분열과 갈등은 계속 불거질 것이고, 이는 기층 민중이 저항에 나설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김영익

4인방 재판

4인방은 마오쩌둥의 신임을 얻어 문화혁명을 주도한 장칭, 야오원위안, 왕홍원, 장춘차오를 가리킨다. 이들은 1976년 마오쩌둥 사망 후에 벌어진 치열한 권력 정투 끝에 패배해 투옥됐으며, 1980~81년 재판에서 문화혁명의 책임을 모두 뒤집어 쓰고 중형을 선고받았다. 덩샤오핑은 이 재판을 시장 개혁·개방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했다.

신좌파

1990년대 대대적인 시장화 정책의 부정적 충격에 반발해 등장한 중국의 사상적 경향이다. 이 경향의 지식인들은 ‘국가의 구실’ 강화를 주장한다. 국가가 시장을 통제하고, 대중에 복지를 제공하며 국가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대체로 마오쩌둥 시대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외부의 적’(미국식 신자유주의, 서방 제국주의, 신장과 티베트의 소수민족 반란)에 반대해 현 정부를 옹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곤 한다.

마녀사냥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의 신호탄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 마녀사냥은 하반기에 더 가속도를 낼 재벌 퍼 주기, 노동자 쥐어짜기를 위한 정치 작업이기도 하다.

실제로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마녀사냥을 시작한 날, 박근혜는 10대 재벌 총수들과 만나 기업 활동의 “장애물을 제거”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는 대선 때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공약했던 상법 개정안도 후퇴할 수 있다고 했고, “통상임금은 공멸의 문제다, 규제를 풀어 달라”는 재벌들의 요구에도 맞장구를 쳤다.

새누리당은 9월 국회를 “경제 엔드르핀 국회”로 만들겠다고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등의 온갖 개악들을 준비하고 있다.

얼마 전 발표한 전월세 대책만 봐도 박근혜 정부가 부자 퍼 주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의 대책에는 전월세 상한제나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같은 실질적인 세입자 보호는 눈 씻고 봐도 없다. 대신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겠다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율 인하 등과 같은 부자 감세 정책만 가득하다.

부자 감세

이명박 정부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런 감세 정책은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악화시켰다. 그리고 이 때문에 지금 곳곳에서 “돈 없어서 복지를 못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었던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은 곳곳에서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조선일보〉는 아예 “정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내놓은 데 대해 솔직하게 사과하면서 … 공약과 복지 정책을 재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정부와 우파가 이렇게 경제 위기 고통전가의 고삐를 죄는 이유는 한국 경제가 여전히 침체해 있고,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 신흥국 경제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정부와 보수언론들은 ‘한국은 다르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올해 7월 산업동향을 보면 기업 설비투자는 15개월 연속 감소했다. 1997년 IMF 위기 이후 가장 긴 기간 동안 투자가 줄고 있는 것이다. 국내 건설 수요액도 12개월째 하락했다. 상반기에 정부가 역대 두 번째로 큰 ‘슈퍼추경’을 발표하고 1997년 이후 최대라는 4·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좀체 악발이 먹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경제 상황은 한국 경제에 더 큰 불안정 요소가 되고 있다. 미국이 양적완화를 본격적으로 축소하기 시작하면 신흥국발 경제 위기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외환보유고가 많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국의 금융시장은 크게 개방돼 있기 때문에 막상 위기가 시작되면 지금 가진 외환보유고는 단 7일치 외환 거래량에도 미치지 못한다.

실제로 올해 6월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6월 10일부터 1주일간 한국 증시에서 이탈한 외국인 자금은 3조 6천억 원으로 아시아 최대였다.

이런 상황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임금 억제, 비정규직 확대, 복지 축소, 민영화 등을 추진하며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 한다. 통합진보당 마녀사냥은 사회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며 고통전가 공격을 강화하겠다는 선전포고인 것이다.

지난 수년간 노동자들은 이미 많은 고통을 감내해 왔지만 경제가 살아나기는커녕 재벌들의 부담 늘어 왔다.

마녀사냥에 맞서며 박근혜 정부의 고통전가에 맞선 투쟁과 연대로 확대해야 한다.

정선영



대놓고 고통전가를 ‘모의’하는 CEO들 이들은 하나같이 노동자들의 권리와 자유를 기업 활동의 ‘장애물’로 여긴다.

통상임금 공개 변론

“왜 ‘기업 부담’을 덜자고 노동자 주머니를 털어야 합니까?”

박근혜 정부는 진보정당 국회의원을 마녀사냥하다가 수사 1주일 만에 내란죄로 구속하는 ‘독재 유전자’의 생얼을 보여 줬다.

이 마녀사냥은 사회 분위기를 얼어붙게 해서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에게 더 손쉽게 전가하려는 정치 작업이기도 하다.

9월 5일에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연 통상임금 관련 재판도 이와 관련 있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 등, 주당 40시간으로 제한된 법정 근로시간을 넘기는 장시간 노동에 대한 추가 비용 책정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연간 몇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추가 노동 비용, 즉 야근·특근 수당 등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판결 이후 기업주들은 지난 3년치 연장근무, 휴일근로 수당으로 무려 38조 원을 배상해야 하고 앞으로도 해마다 8조 원씩 인건비가 더 든다며 길길이 날뛰었다.

박근혜는 방미 기간에 GM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꼭 풀어 나가겠다”고 약속했고, 지금까지도 이 판결 내용을 무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최저임금을 많이 올릴 수 없다고 하거나,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만 통상임금 인상 혜택을 봐 노동자 내의 임금격차를 늘릴 것이라며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려 했다.

삼권분립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박근혜 정부가 나서서 사실상 재심을 요구한 셈이다. 결국 대법원은 갑을오토텍(위니아만도) 통상임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9월 5일에 열린 공개변론은 이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위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 재판이 정부의 압력을 받은 것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공개변론을 하기로 결정한 듯하다. 그러나 최근에 판례가 나온 사안에 대해 그것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심을 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게다가 사법부는 공개변론 내용 중 ‘박근혜가 사법부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프레젠테이션을 하지 말 것을 사전에 요구하기도 했다. 공개변론 과정에서 많은 대법관들이 이번 판결이 기업주들에게 끼칠 효과, 즉 38조 원이 경제에 미칠 효과를 거론하며 변호인들을 압박했다.

그러나 이 판결이 경제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라는 협박은 황당한 것이다.

협박

첫째, 노동자 측 변호인이 잘 지적했듯이 3년치 체불임금 38조 원을 부담해야 하는 기업주들을 걱정해야 한다면, 수십년 동안 수백조 원을 못 받은 노동자들의 부담은 왜 무시하는가. 이날 이상훈 대법관도 ‘판결 내용은 인정하지만 사측의 처치가 딱하니 비용을 줄여 달라’는 거냐, 아니면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냐 하며 38조 원 주장이 순전히 판결에 압력을 넣기 위한

수단임을 꼬집었다.

둘째, 노동자들의 요구는 단지 체불임금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다. 통상임금이 올라 추가 노동 비용이 대폭 높아져야 기업주들이 야근·특근을 시키는 대신 신규 고용을 늘릴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장시간 노동과 실업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다. 왜 적은 기본급 때문에 야근·특근을 밥먹듯 해야만 해 OECD 최장 노동시간으로 과로사하는 노동자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일자리가 없어 비관 자살하는 청년들이 공존해야 하는가.

셋째, 물론 이런 조치는 기업주들의 이윤을 줄이는 효과를 낼 것이다. 그러나 체불임금 38조 원은 기업주들이 투자하지 않고 쌓아 둔 사내유보금 수백조 원과 조세도피처에 숨겨 둔 9백조 원에 대면 보잘것없는 수준이다.

연간 8조 원의 추가 비용도(기업주들은 비용이라고 부르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소중한 임금이다) 1천2백50조 원에 이르는 이 나라 GDP에 견주면 1퍼센트도 안 되는 돈이다. 어렵잡아 2천5백만 명에 이르는 노동계급과 그 가족들에게 GDP의 1퍼센트도 안 되는 돈을 분배하는 게 부당한 일일까? 그것도 ‘그동안 때먹은 임금’인데도?

이 점에서 일부 변호인들이 ‘실제로 지급될 체불임금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지나치게 수세적인 것이었다. ‘실제로 법원에 문제 제기해 승소할 조건에 있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되겠냐고 한 것도 아쉽다.

조직 노동자들은 이 판결의 효과가 대기업업을 넘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되도록, 즉 전체 노동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 기본급 비중과 액수를 대폭 늘리는 임금체계 개선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도 요구해야 한다. 그럴 때 대기업 정규직만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정부의 이간질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다.

오로지 매달 지급된 돈만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사측의 주장은 워낙 균색한 것이라 대부분의 대법관이 이를 지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 연봉은 어쩔 건가?”, “채용 당시 연간 6백 퍼센트 상여금을 제시한 것은 성과에 따른 포상이 아니니 사실상 통상임금을 뜻하는 것 아닌가?”, “똑같은 돈을 매달 나눠주면 통상임금이고 두 달이나 세 달에 한 번씩 몰아주면 통상임금이 아닌가?”, “명절 선물비는 통상임금인데 왜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닌가?”

이처럼 자본주의적 법리에 따르더라도 앞뒤가 맞지 않는데도 탐욕스러운 기업주와 그들의 정부는 온갖 경로로 사법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 이 때문에 판결 결과는 낙관할 수 없다.

따라서 법적 소송뿐 아니라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정치적 투쟁을 조직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건설해야 한다.

장호중

아랍 6개국 혁명단체 공동 성명

“공습의 진정한 목표는 미국 제국주의의 입지 강화”

시리아·이집트·이라크·모로코·레바논·튀니지 혁명단체들이 미국의 공습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 볼 수 있다.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수십만 명이 다치거나 장애를 입고, 수백만 명이 도시와 마을에서 쫓겨났다. 시리아 민중의 피와 땀으로 사들인 전투기, 스커드 미사일, 폭탄, 탱크 같은 온갖 무기가 도시와 마을을 파괴했다. 이 모든 일들은 조국을 수호하고 이스라엘과 군사적 균형을 맞춘다는 명분으로 자행됐다. 그러나 시리아 정권은 이스라엘이 시리아 땅을 차지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했고, 이스라엘의 연이은 침략에 응전하는 데 실패했다.

시리아, 레바논, 이집트 등에서 스탈린주의 좌파들이 아사드 정권과 그 동맹을 지지한 것은 또 다른 불운이었다. 그들은 아사드 정권이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가 나침반이 저항적 정권이라고 옹호했다. 이런 태도는 평범한 시리아인들이 좌파를 대하는 태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2011년 3월] 혁명 발발 후 7개월이 넘도록 시리아 민중은 평화적으로 정권의 범죄에 맞서 싸웠지만 유엔과 안보리는 정권의 범죄행위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 사이 정권의 저격수와 강패들의 총구 앞에 시위대는 한 명 또 한 명 쓰러져 갔다. 가장 영향력 있는 활동가들이 감옥과 수용소에 구금돼 최악의 고문을 받고 처형됐다.

러시아 제국주의는 시리아 집권당의 가장 중요한 동맹으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 안보리에서 이 범죄행위에 대한 어떠한 비난도 하지 못하도록 뒤를 봐주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시리아에서 학살과 파괴가 계속 이어지는 것에 별 문제의식이 없다.

망신

지금 오바마는 [공습하겠다는] 위협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듯 보이는데 그러지 않으면 망신을 당하기 때문이다. 단지 오바마 자신뿐 아니라, 아랍과 전 세계를 이끈다는 막강하고 오만한 나라의 위신이 실추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시리아 반정부 세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이 공습과 미국의 입장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들은 시리아 공습으로 자신들이 집권할 기회가 열리고, 대중운동과 대중의 독립적 결정을 목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런 일부 반정부 세력과 자유시리아군의 지도부가 아무 거리낌 없이 공습 목표물들에 대한 정보를 미국에 넘기는 행태에 놀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눈앞으로 다가온 서방 제국주의의 공습은 어떤 점에서도 시리아 혁명을 지지하는 의도가 없다. 이 공습의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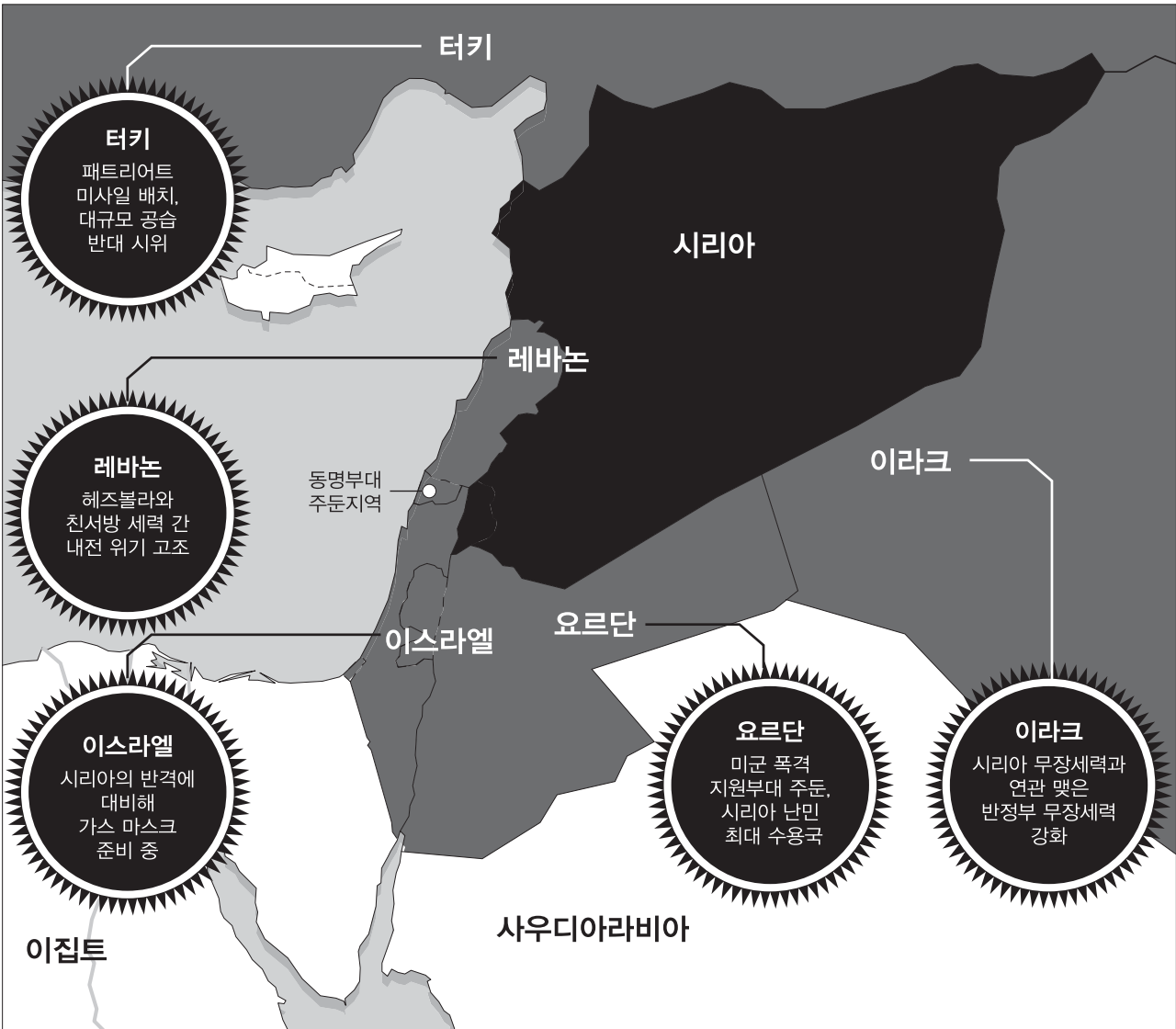
표는 다른 것이다. 시리아 정권을 압박해 협상장에 나오도록 하고, 정권 자체는 유지하지만 바샤르 알아사드는 전면에서 물러나게 하면서, 미래의 시리아에서 미국 제국주의의 입지가 러시아 제국주의보다 훨씬 더 강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상황,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영향과 결과를 잘 알고 적절히 대처해야 시리아 민중은 진정으로 혁명적인 지도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시리아 민중의 현재와 미래 이익을 바탕으로 한 헌신적 투쟁 과정에서 혁명적 지도부는 그런 이익을 담은 급진적 강령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고, 그 강령은 승리의 길에서 발전되고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든 러시아든, 모든 제국주의적 개입을 반대한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시리아에 승리를, 아사드와 모든 독재자들에게 영원한 패배를. 시리아 민중 혁명 만세.

2013년 8월 31일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이집트) / 혁명적좌파경향(시리아) / 공산주의자연합(이라크) / 알 무나딜 아(모로코) / 사회주의자포럼(레바논) / 노동자좌파동맹(튀니지)

출처 영국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2368호
번역 정다운·차승일



살얼음판에 돌 던지기 미국의 시리아 공습은 의도치 않게 지금도 불안정한 중동 정세를 한층 격화시킬 수 있다.

오랫동안 아랍을 유린해 온 제국주의

서방 열강은 지난 1백 년 동안 아랍 지역을 지배·통제하고 망쳐 왔다.

19세기 가장 강력한 제국주의 열강이었던 영국과 프랑스는 아랍 지역 일부를 점령하거나, 자기 말을 잘 듣는 정권을 세웠다. 나중에는 이탈리아도 쟁탈전에 뛰어들어 오늘날 리비아가 된 지역을 점령했다.

오늘날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요르단, 팔레스타인을 구성하는 지역은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다. 제1차세계

대전 때 영국은 오스만에 맞서 아랍인들이 항쟁을 벌이면 아랍 국가의 독립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거짓말이었다.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서방의 지배자들은 이 지역의 석유를 탐냈다. 열강들은 ‘해방’이나 ‘자치’ 같은 단어로 자신의 제국주의적 개입을 정당화하며, 이 지역을 나눠 가졌다. 그리고 수니파와 시아파 무슬림, 기독교도와 무슬림을 서로 이간질했다.

서방은 한편으로 대중 투쟁을 잔인하게 진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토착 지배자들과 동맹을 맺었다. 이 토착 지배자들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개입할 때마다 제국주의자들과 협력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주의 세력이 된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의 전략을 계승했다. 미국도 친서방 왕정·독재자들을 지원했다.

동시에 미국은 이스라엘을 키웠다. 이스라엘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경비견’ 구

실을 톡톡히 해 왔다. 1967년 이스라엘은 제3차 중동 전쟁을 벌이고 승리해 아랍 민족주의의 기세를 꺾었다. 전쟁에서 패배한 아랍 국가들은 친미 독재 국가들로 변신했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아랍 혁명은 오랜 세월 미국 제국주의의 앞잡이 구실을 한 정권들을 뒤흔들며 제국주의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과 서방 열강들이 호시탐탐 군사 개입 기회를 노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김인수

예전 같지 않은 미국의 기세

미국이 승승장구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미국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강화하려 일으킨 “테러와의 전쟁”은 오히려 미국 제국주의의 한계를 보여 줬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개입할 때는 압도적 군사적 우위를 이용해 석유 공급권을 장악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미국이 이라크 수렁에 빠져 있는

동안 오히려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약점을 이용해 자신들의 지위를 강화할 수 있었다.

2008년에 시작된 미국발 경제 위기는 패권국으로서 미국의 지위를 더 불안하게 만들어 왔다. 미국은 경제 위기의 진원지였고, 세계경제를 끌어내렸다. 아직 미국에 못 미처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경제는 미국 지배자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미국은 한편으로 부상하는 중국 같은 경쟁국을 신경 쓰면서, 다른 한편으로 아랍 세계에 개입하는 등 ‘세계의 경찰’로서의 강력한 통제력을 과시해야 한다. 경제 위기의 여파로 국방비는 줄이면서 말이다.

이런 아슬아슬하고, 모순된 처지에서 벗어나려 미국은 시리아를 폭격하려 들

고 아랍 지역뿐 아니라 동아시아 등지에서도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 든다.

이런 제국주의적 행태에 일절 반대해야 한다.

시리아 폭격에서 미국의 오른팔인 영국이 이탈한 사건은, 제국주의와 전쟁에 반대해 온 운동이 헛되지 않았고 갈 길이 어둡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김인수

그리스

반파시즘 활동가 탄압을 중단하라

그리스 정부가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운동’(KEERFA)과, 그 단체의 주도적 활동가 페트로스 콘스탄티누가 수사를 받고 있다. 페트로스 콘스탄티누는 아테네 시의원이자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의 당원이다.

그리스 정부는 ‘KEERFA는 경찰이 알아바니에게 도주법들을 사실상 즉결 처형했다고 비판했다’며 이것은 “대중의 공

포를 조장하고 국가의 대외 관계를 교란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문제 삼았다. 그리스 정부가 제시한 유일한 증거는 KEERFA의 주장을 악랄하게 왜곡한 파시스트 정당 황금새벽당 웹사이트의 글이었다.

탄압의 진정한 목적은 KEERFA에 대한 보복이다. KEERFA는 1월 19일 아테네에서 반파시즘 시위를 조직했는데

40개국의 반파시즘 활동가들이 이를 지지했다. 또한 그리스 노동자와 이민자 등이 단결해서 총파업을 벌이도록 조직했다.

긴축을 밀어붙이기 위해 파시즘을 부추기고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려는 그리스 정부는 KEERFA를 눈엣가시로 여겼다.

이미 반파시즘 활동을 한 혁명적노동

자당(BEKK) 대표와 아네테 폴라테크닉의 전 대학총장 K 무초리스가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그리스인’ 환자에게만 현혈을 하겠다는 황금새벽당의 인종차별적 운동을 노조 결정에 따라 저지한 병원 노동자들도 고발당했다.

그리스 국가는 파시스트들의 중요 범죄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이민자들에 대한 연대 행위는 범죄로 몰고 있다. 반파

시즘 투자들에 대한 이 같은 기소 행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천경록

· 그리스 정부의 반파시즘 활동가 탄압에 반대하시는 분은 antiracismantifascism@yahoo.gr로 연대 메시지를 보내주시십시오.
· 이 내용과 관련된 그리스 활동가들의 성명서는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 군부의 반혁명

위기에 처한 혁명을 구출해야 한다

6월 30일 수천만 명이 혁명을 배신한 대통령 무르시에 반대하는 시위에 나서다.
7월 3일 군부가 무르시를 끌어내리다.
8월 14~16일 군부가 무르시 지지자 2천 여 명을 학살하다.
8월 22일 반혁명의 상징인 독재자 무바라크가 교도소에서 석방되다.

지금 이집트에서도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마녀사냥이 한창이다.

마녀사냥은 주되게 무슬림형제단을 겨냥한다. 이집트 군부는 무슬림형제단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후원 아래 이집트 국가를 무너뜨리려는 테러를 모의했다는 황당한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 마녀사냥은 군부가 시위대 1천 명 이상을 학살한 8월 14일 이후 부쩍 강화됐다.

마녀사냥은 무슬림형제단에 그치지 않는다. 군부는 노동자 파업을 진압하면서 파업 노동자들이 무슬림형제단 지지자라고 우겼다. 또한 무르시 집권이 최전선에서 싸운 4월6일청년운동도 그 지도부가 ‘무슬림형제단을 지원하는 서방과 내통’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최근 이집트 경찰은 연구용 위치탐지기를 달고 있다는 이유로 황새까지 ‘프랑스 스파이’ 혐의로 ‘체포’했다!

아랍 혁명에 위협을 느낀 이집트 안팎 모든 반동 세력이 반혁명을 위해 뭉친 것이 마녀사냥의 진정한 배경이다.

이집트 최대 기득권 집단인 군부가 반혁명을 주도하고 있다. 혁명 이후 터져 나온 노동자 운동을 짓밟고 싶은 자본가들도 군부를 열렬히 지지한다. 한 이집트 갑부는 최근 “향후 2년간 시위를 금지하자” 하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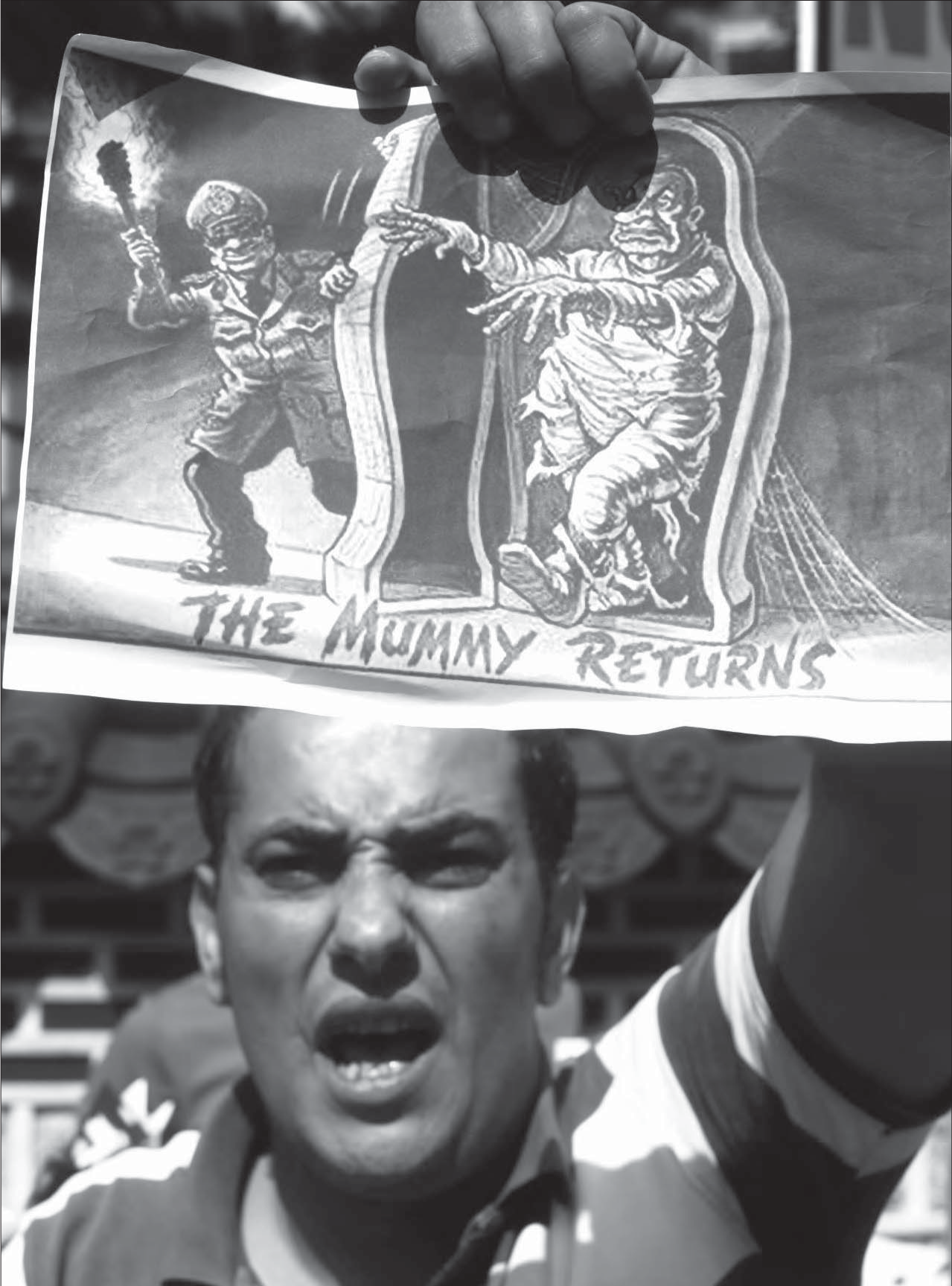
미국 오바마는 겉으로는 학살을 비난하면서도 이집트에 주는 군사 지원을 전혀 줄이지 않았다. 오바마는 아랍 혁명이 제국주의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혁명 불길이 자국으로 번질까 두려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친미왕정들 역시 엄청난 돈을 지원하며 군부를 지지한다. 지난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공습 때 아랍 혁명 때문에 개망신 당한 이스라엘은 이집트 군부의 학살을 비난하는 국제적 여론을 온몸으로 막고 있다.

많은 이집트 좌파가 이런 마녀사냥과 반혁명에 굴복했다.

주적은 국가

2012년 대선에서 노동자들에겐 많은 지지를 받았던 나세르주의자 사바히는 군 수뇌부 엘 시시를 “대중의 영웅”으로 치켜 세웠다. 기회주의자들이 모인 구국전선은 8월 14일 학살을 “민중의 집단적 의지를 군부가 결연히 실행한 것”이라고 미화했다.



“미라(무바라크)가 되돌아오고 있다” 9월 1일 주한 이집트 대사관 앞에서 열린 국내 거주 이집트인들의 시위.

그러나 모든 좌파가 이런 마녀사냥에 굴복한 것은 아니다. 혁명 이전부터 반정부 투쟁을 이끌었고 무르시 퇴진 투쟁에도 앞장선 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RS)는 “[혁명의] 주적은 이집트 국가”라고 옹계 주장한다.

또한 무슬림형제단이 혁명을 배신했던 것보다 “옛 지배계급이 혁명 전체를 없애려 드는 것”이 더 큰 위협이라고 지목한다.

오늘날 이집트는 1917년 러시아에서 2월 혁명 이후 등장한 케렌스키 정부를 타도하고 혁명을 파괴하려고 우익 군장

성 코르닐로프가 쿠데타를 일으킨 상황과 많이 닮았다. 20세기 초 독일에서 카이저(독일 황제) 퇴진 후 부상한 사민당이 히틀러를 앞세운 옛 지배계급의 반동으로 위기에 처한 상황과도 유사하다.

러시아에서는 대중적인 혁명 정당으로 자리잡은 볼셰비키 지도 아래 케렌스키 정부와 일부 제후해서 반동을 물리칠 수 있었다.

그 결과 혁명의 물길을 다시 왼쪽으로 돌릴 수 있었고, 애초 혁명을 배신했던 케렌스키 정부까지 몰아내며 혁명을 완

수할 수 있었다.

반면에 독일에서는 공산당이 반혁명 위협을 과소평가하고, 사민당을 지지하는 노동자들과 힘을 합쳐 히틀러에 맞서 함께 싸우길 거부하면서 결국 반혁명이 승리했다.

지금 이집트 혁명의 성패는 혁명적 좌파의 역량에 달려 있다.

혁명이 승리하려면 군부에 반대하는 세력(무슬림형제단 포함)을 결집해서 이집트 군부의 마녀사냥과 반혁명을 막아야 한다.

김종환

이슬람주의를 보는 올바른 관점

서방이 시리아를 공습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논리 중에는 좋은 것도 많지만 몇 가지 끔찍한 논리도 있다. 그중 최악은 이슬람주의자들과 같은 편에 서면 안 되기 때문에 시리아 공습에 반대한다는 논리다.

〈인디펜던트〉의 로버트 피스크는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했다 “오바마는 자신이 알 카에다 편에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명망 있는 언론인이 이슬람혐오증을 들먹이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시리아 정권과 싸우는 세력 중에서 이슬람주의 조직은 소수에 불과하다. 종교적, 인종적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이 자유를 바라며 혁명에 참여했다.

그러나 중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주의에 정치적 기대를 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19세기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 지배 시대부터 21세기 초 이라크에서 1백만 명을 죽인 전쟁에 이르기까지 서방 열강들은 몇 세대에 걸쳐 중동에서 민중을 탄압했다.

이슬람혐오증

중동의 민중은 언제나 저항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는 소련을 지지한 공산당들과, 세속주의 아랍 민족주의자들이 저항을 이끌었다. 그러나 그들은 체제와 타협했고 이집트와 시리아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독재 정권으로 나아갔다.

반면에 이슬람주의자들은 여전히 제국주의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기대를 걸었다.

팔레스타인에서 이슬람주의 운동인 하마스는 1987년 인티파다*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면서 인기를 얻었다.

이집트에서는 옛 좌파가 국가에 일관되게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슬림형제단은 무바라크 치하에서 유일하게 세력을 갖춘 저항 단체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무슬림형제단은 복지를 제공하면서 뿌리를 내렸다. 그러나 정작 정권을 잡자 그들이 결코 급진적이지 않다는 것이 입증됐다.

다양한 이슬람주의 단체들과 경향들은 모두 서로 다르다. 시리아 독재자 바샤르 알 아사드는 혁명을 분쇄하려고 레바논의 [이슬람주의 무장조직] 헤즈볼라를 이용했다. 한쪽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지역의 왕정들은 혁명을 가로채려고 [시리아 이슬람주의 저항군] 알 누스라 여단을 지원했다.

우리는 이 단체들이 이슬람주의 단체여서가 아니라 그들이 혁명에 맞서 행동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주의자든, 민족주의자든, 이슬람주의자든,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이 압제자에 맞서 싸울 권리를 지지한다.

데ιβ 부엘
출처 영국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69호
번역 이진화

이집트 군부는 하이탐 모하메다인을 석방하라!

이집트의 저명한 노동 변호사이자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RS)의 회원인 하이탐 모하메다인이 9월 5일에 체포됐다.

하이탐은 변호를 맡아 달라고 요청한 노동자를 만나려고 카이로에서 수에즈로 가던 중이었다.

군부는 하이탐을 검문소에 억류하고 있다가 수에즈에 있는 경찰서로 이송했다.

RS는 하이탐이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하이탐은 오랫동안 혁명가로서 활동해 왔다. 그는 노동자 투쟁을 방어하는 일에 앞장섰고, 최근에는 수에즈 철강 노동자들을 변호하고 있었다. 얼마 전 군부는 수에즈 철강 노동자들의 파업을 파괴한 바 있다.

하이탐은 6월 30일 무르시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에 참가했다. 그러나 하이탐과 RS는 무르시가 퇴진한 이래 계속해서 군부가 정권을 잡는 것에 공공연히

반대해 왔다.

최근 한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하이탐은 이렇게 말했다. “국방장관 압델 파타엘 시시는 반혁명 주동자입니다. 시시는 거리에서 이슬람주의자들을 탄압하며 자신의 본질을 숨기고 있습니다. 무바라크 정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RS의 회원인 와심 와그디는 이렇게 말했다. “하이탐은 전 세계 혁명가들의 국제적 연대가 필요합니다. 어느 나라에 있든 우리의 적은 하나입니다. 하이탐은

단지 이집트 혁명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더 나은 세계를 향한 투쟁의 일부입니다.”

주디스 오어
출처 영국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69호 / 번역 차승일

석방 요구 국제 연서명에 참여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영문 이름(소속단체),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http://bit.ly/1aTG1dD>

인티파다
이스라엘에 맞선 팔레스타인 민중 반란.

칠레 피노체트 쿠데타 40년

“노동자 권력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다”

올해는 칠레에서 장군 피노체트가 쿠데타를 벌인 지 40년이 되는 해다. 1970~73년 칠레는 혁명적 시기였다. 1973년 9월 11일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혁명을 분쇄하기 전 칠레에서는 자본주의와는 달리 대중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 형태가 잠시나마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젊은 활동가로서 민중 권력을 몸소 경험한 **마리오 나인**이 그 찬란했던 시기를 되돌아 본다.

“우리는 더는 단지 임금 문제만 가지고 부자들과 싸우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부자들의 공장을 점거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넘겨 받아 노동자 스스로 통제해 생산 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

1973년 1월 <칠레 호이>라는 신문에 실린 이 혁명적 발언의 주인공은 마리아 파리아스 고도이다. 고도이는 1970~73년 칠레를 휩쓴 계급투쟁의 놀라운 발전 과정에 참가한 저명한 활동가였다.

노동자, 학생, 농민, 빈민촌 주민들의 급진화는 실로 어마어마했다. 그들은 격렬한 투쟁을 거치면서 칠레의 부유층과 권력자들에 맞서는 거대한 전투 조직을 만드는 데까지 나아갔다.

오래전부터 성장해 온 이 운동은 칠레 노동계급 중 정치적으로 가장 각성한 일부가 “코르도 인디스트리알”, 즉 각기 다른 공장과 작업장에 속한 노동자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조정 위원회를 수립했을 때 절정에 이르렀다.

노동자 민주주의의 토대를 놓은 코르돈은 모든 피억압자들의 운동으로 변져 나갔다. 농촌에서는 농민 위원회들이 토지를 점거했다. 도시에서는 반란을 일으킨 청년들이 새 세상의 도래나 다가올 반동을 알리는 벽화를 그렸다.

1970년에 살바도르 아옌데의 국민연합 정부가 선출됐다.

아옌데 정부(사회당과 공산당을 포함하는 연립정부였다)는 국유화 정책을 실시했고, 이것은 사장들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다.

미국 제국주의의 지원을 받던 칠레 지배계급은 아옌데의 개혁을 막으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테러를 저지르는 것은 물론이고 아옌데 정부에 충성하는 고위 장교들을 암살하기도 했다.

아옌데는 이런 반동 세력과 타협하려 애쓰는 한편, 동시에 성장하고 있던 운동의 기세를 꺾으려 했다. 바로 그 운동 덕분에 집권할 수 있었는데 말이다. 이런 타협은 결국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일



“민중 권력을 만들자” 칠레 혁명 당시 노동자들이 수도 산티아고에서 행진하고 있다.

알고 보기

1969~70년	노동자 파업과 농민의 토지 점거 만발
1970년	사회주의자 아옌데 대통령 당선
1972년 10월	자본가들의 사보타주와 이에 맞서는 코르돈 등장
1973년 8월	아옌데가 피노체트를 군부 총사령관으로 임명
1973년 9월 11일	미국 지원 아래 피노체트 쿠데타 성공, 아옌데 사망

으킨 쿠데타로 아옌데 자신이 타도되고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칠레에서는 새로운 사회가 출현하던 시기가 있었다. 아래로부터 운동은 정부를 방어하고자 결집하면서 새로운 차원에 도달했고, 그 뒤에는 사회를 운영하기 시작한 새로운 조직들로 발전했다.

이러한 전환은 화물차주들을 포함한 사장들이 경제의 숨통을 조여서 정부를 무너뜨리고자 “파업”을 조직한 1972년 10월에 시작됐다.

사장들은 엄청난 수의 화물차를 나라 곳곳의 핵심 교통 요충지에 집결시켜서 최악의 혼란과 운송 중단 사태를 유발하려 했다.

사장들의 움직임이 알려졌을 때, 나는 내가 자란 빈민촌에서 열린 중요한 모임에 참가하고 있었다. 이 모임에서 우리는 마을 총회를 조직했고, 슈퍼마켓에서 식

료품을 징발하는 위원회를 결성했다.

또, 우리는 방어 위원회와 교육·보건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런 조직들은 “공동조직위원회”라고 불렸다.

노동자들은 화물차를 압류했고, 사장들이 닫아 놓은 슈퍼마켓 문을 다시 열었다. 생산을 중단시키려 한 공장주들은 쫓겨났다.

노동자들은 공장과 기업 들을 점거했고, 그 자산을 압류해 집단적 노동자 민주주의라는 원칙 아래 운영했다.

노동자, 학생, 빈민촌 주민 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 주고 병원과 학교 등 필수 서비스들을 계속 운영했다.

코르돈들은 물자의 생산과 유통을 집단적으로 토론해 결정하고, 원자재 조달과 공장 운영을 조직했다.

코르돈은 특정한 정치적 소속을 뛰어넘어 노동계급을 규합하고 조직했다.

부르주아지는 공세를 펼치는데 아옌데는 고조되는 반동에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혁명적 조직은 더 효과적이면서 전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요구에 화답하며 솟구쳐 올랐다.

집단성

이 혁명적 나날들은 우리 계급의 가장 찬란했던 순간으로 남아 있다. 노동계급은 경제를 계속 돌려서 사장들의 파업을 물리쳤고, 그 과정에서 자본주

의가 강요하는 암울하고 소외된 삶에 도전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는 지역에서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모든 일을 민주적으로 토론했기 때문이었다.

새로운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자유에 대한 자각이 우리의 영혼을 휘감았고, 우리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인간임을 보여 주는 확고한 증거라고 느꼈다. 우리 노동의 과실은 이제 우리 것이었다. 우리를 수탈하는 사장들의 것이 아니었다.

그때부터 우리는 서로 분리되고 고립된 개인들이 아니라 형제·자매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 짧은 반란의 나날 동안 우리는 해방으로 나아가는 길을 집단적으로 개척하며, 계급적 각성을 향한 복잡다단한 여행을 시작한 것이었다.

1973년 9월 11일, 어둠을 틈타 마침내 테러가 자행됐다. 아옌데는 라디오 방송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음을 발표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전언이었다.

곧 탱크가 진주해 자유의 불길을 짓밟았다.

칠레는 이후 17년 동안 계엄령 상태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 곳곳의 강제 수용소에서 가장 야만적인 신체적·정신적 고문을 당했다. 나도 강제수용소에서 2년 6개월을 보냈다.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종”됐다.

쿠데타는 변혁 운동을 분쇄했다. 그러나 우리가 노동자 권력의 씨앗을 심었던 시절에 대한 기억마저 지워버리지는 못했다.

오늘날 세계 자본주의는 1930년대 이래 손꼽힐 만큼 심각한 구조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 위기 속에서 낡은 질서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칠레의 교훈이다.

그 혁명적 나날에 우리는 공장과 마을과 농촌을 통제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투쟁하면서 스스로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출처 영국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154호 / 번역 김용민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혁명적 현실성》

콜린 바커 외 지음, 김용민 옮김, 책갈피, 464쪽, 18,000원

서평 | 《폭력의 자유》

언론은 왜 공공의 적이 됐는가



김종철 지음, 시사회북, 670쪽, 25,000원

2013년 대한민국의 언론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알 권리에서 퇴보하고 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규탄하며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모이는데도, MBC는 여론이 돼 매미가 울고 있다는 소식을 주요 뉴스로 다뤘다. KBS는 촛불집회를 겨우 한 번 단신으로 방송했다.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마녀사냥하자, 이에 발맞춰 언론은 마녀사냥에 기름을 들이붓고 있다. 최근 MBC, KBS에서는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와 진보당 마녀사냥 관련 방송을 메인 데스크에서 자르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동아일보> 해직기자 출신인 김종철은 자신에게, 그리고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언론은 민중의 벗인가? 아니면 공공의 적인가?”

《폭력의 자유》에서 김종철은 한국 언

론의 역사를 자세히 풀어 쓰고 있다. 그는 머리말에 “권력이나 대자본과 하나가 되거나 스스로 권력이 되어 민중을 억압하는 언론은 그 자체가 반사회적이다.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언론이야말로 민중의 진정한 벗”이라고 말한다.

오늘날 조종동과 공중파 방송사들은 민중의 벗이 아니라 지배계급의 확성기로 전락했다. 이 매체들은 분명히 공공의 적인 것이다.

종편들도 마찬가지다. 종편들의 목적은 뚜렷하다. 민중의 눈과 귀가 돼 말하는 방송이 아니라, 정권의 눈과 귀가 돼 민중을 농락하는 방송이 되는 것.

지금 이석기 마녀사냥을 보도하는 것을 봐도, 종편들은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앞뒤 맥락 잘라내고 증거로 제출한 녹취

록을 녹차 우려먹듯 10탕, 20탕 보도했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촛불 시민들과 마녀사냥을 방어하려는 입장은 방송에 1분도 보도되지 않는다.

1분

저자는 언론이 민중의 벗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안으로 위키리크스를 제시한다. 위키리크스는 지배계급이 숨기고 싶었던 수많은 기밀문서를 폭로했다. 그는 진실을 거부하지 않는 시스템과 진실을 폭로하는 용기가 집단지성과 결합하면서, 위키리크스가 국가정보의 투명성도 가져올 것이라고 봤다.

저자는 언론이 탄압받으면서도 자본에 대항하고자 했던 경험들을 친절하게 짚어 줬다.

그렇지만 그는 지배계급 언론 통제의

뿌리를 사회구조가 아니라 주로 정치권력에서만 찾는다. 그래서 정치 스캔들을 폭로하는 위키리크스를 대안 언론으로 꼽은 것이다.

물론 지배계급의 더러운 이면을 밝히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자본주의 체제는 지배계급의 확성기가 된 언론을 통해 지배 이데올로기를 퍼뜨린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피지배계급, 특히 자본주의의 무덤을 파는 노동자 계급은 이에 맞서 투쟁한다. 진정한 언론이라면 투쟁하는 민중의 시선과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를 써야 한다. 이런 구실을 해낼 <레프트21> 같은 혁명적 신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연은정



기만적 줄 세우기,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8월 29일 교육부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을, 전임교원 확보율 등을 기준으로 성공회대, 삼지대 등 35개 대학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개강을 앞두고 자신의 학교가 '부실' 대학이라는 오명을 쓴 학생과 교원 들은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이다. '부실' 교육의 책임을 져야 할 정부와 사학재단이 아니라 애꿎은 학생과 교원 들에게 고통이 전가된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은 그 기준부터 불합리하기 짝이 없다. 지난 몇 년간의 저항과 반발로 올해부터 인문·예술 계열은 취업률 산정에서 제외됐지만, 여전히 나머지 학문들은 취업률을 기준으로 줄 세우고 있다. 이때문에 기초학문은 고사하고 대학은 취업 학원으로 전락하고 있다.

또한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밖에 없는 지방 대학들은 정부의 줄 세우기식 상대평가에서 압도적으로 불리하다.

취업률 지표만 문제인 것이 아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대학이 입학 정원을 감축하면 평가에서 가산점을 주기 시작했다. 그러자 전국의 대학들은 취업률 낮은 학교의 정원을 감축하거나 아예 학과를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을 더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또 '학사 관리 및 교육과정' 지표는 상대평가를 강화해 대학을 학점 경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부실'대 탈출?

그러나 이런 구조조정은 취업률을 '뺨뼉'해 지표의 형식적 개선 효과만 낼 뿐이다. 사실 대졸자들의 취업은 개별 대학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정부와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서 개별 대학들을 채찍질해 취업률을 높이라고 하니 이런 '지표관리 꿈수가 공공연히 벌어지는 것이다.**

기만적인 대학 구조조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노동자들이 입는다.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학교 학생들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에 제한을 받는다. 또 학생들은 학과 통폐합 등 때문에 교육권을 침해받는다. 구조조정으로 대학이 퇴출되면 학생과 교직원, 교수 들은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는다.

심지어 지난해 대전의 한 교수는 취업률을 높여야 한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하기도 했다.



취업률을 잣대로 한 줄 세우기는 오로지 기업주들에게만 이익이 된다.

그러나 부실 교육의 책임은 지금껏 재정 지원 등 고등교육의 책임을 회피해 온 정부와 돈벌이에만 혈안인 사학 재단들에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학 당국에게는 계속 특혜를 주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대학을 사유재산처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법안까지 만들려 한다.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교 졸업자 수가 줄어 정원을 감축하지 않으면 2023년에는 대학 1백 개가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가 곧바로 대학의 위기로 이어지는 이유는 사립대 중심의 대학 구조와 등록금 의존적인 대학의 수익구조 때문이다. 입학 정원이 줄면 그만큼 등록금 수익도 줄어 대학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따라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는 진정한 대안은 운영이 어려워지는 사립대를 국립대로 전환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학생 수가 줄어도 대학이 문 닫을 위기를

맞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고등교육에 지금보다 돈을 더 쓸 의지가 전혀 없다. 또 지배자들은 지금 같은 경제 위기에 노동계급 자녀 대다수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낭비라고 본다. 높은 청년실업이 '청년들의 눈높이' 때문에 벌어진다고 높은 진학열을 탓한다.

그러나 고등교육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다. 진정 부실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학들의 돈벌이를 장려하고, 비리재단 이사들을 비호해 온 정부의 정책을 바꿔야 한다. 또 무능하고 부패한 사학재단을 퇴출시키고 대학을 국립화해서 대학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런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에 맞서 9월 2일 중앙대 구조조정 공대위, 경남대 철학과 폐과 비대위, 경기대 총학생회, 동아대 인문대·사회대 학생회, 한국대학생연합,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반값등록금 범국본 등의 단체들이 모여 '대학 구조조정 공동대책위'를 발족했다. 우리는 정부의 부당한 구조조정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이아혜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활동가

시간강사 대량해고 중단하고 고용안정 보장하라

정진희 비정규직교수노조 조합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과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효과로 올해 시간강사들이 대거 해고됐다. 올해 상반기에 시간강사 1만 명가량이 해고된 것으로 추산되는데, 강사법 개정안이 내년에 시행되면 수만 명 더 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들은 강사의 퇴직금, 4대 보험 등 비용 부담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한 '강사법' 시행에 앞서 2012년부터 시간강사를 대거 해고해 왔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강사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하면서도 법적인 교원 지위는 주지 않는 기만적인 법안이다. 9시간 이상 근무하는 강사는 교원 지위 보장 관련 법(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은 못 받으면서도 교원확보율 산정 시에는 '교원'으로 인정된다. 그리 되면 대학들은 정규직 교원 충원을 기피하고 비정규직 강사를 대거 늘릴 게 불 보듯 뻔하다.

비정규직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연구강의교수제 도입을 촉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전임교원 법정 총원율 1백 퍼센트 달성을 요구하면서 그때까지 한시적 보완책으로

연구강의교수제 실시를 요구한다.

연구강의교수제는 시간강사, 겸임교수, 초빙교수 등 각종 비전임교수제를 모두 폐지해 '연구강의교수'로 통합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2년 이상 단위로 재계약을 보장하는 안이다. 연구강의교수는 전임교원이 아니므로 전임교원확보율에 포함하지 않아 정규직 총원 회피용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연구강의교수의 인건비는 정부가 지원해 '최저연봉제'(주당 9시간 담당 시 4년제 대학 조교수 평균연봉의 3분의 2 이상 또는 3인 가구 표준생계비 이상)를 도입한다.

6개월마다 고용 계약을 맺는 시간강사의 평균 연봉이 6백50만 원 수준인데, 2년 이상 계약에 연봉을 5천만 원 받는 연구강의교수제가 도입되면 비정규 교원들의 조건이 상당히 향상될 것이다.

교육부와 대학당국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연구강의교수제에 반대해 왔고, 민주당도 연구강의교수제 대체법안 발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 그러나 대학 교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 교원의 처우 개선 없이 "교육역량 강화"를 말하는 것은 사기에 불과하다. 연구강의교수제를 즉각 도입해 비정규 교원들의 고용 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이루는 동시에 정규직 교원 1백 퍼센트 충원을 의무화해야 한다.

정부 책임 전가하는 기성회비 수당 삭감

반값등록금을 핑계로 정부가 국립대에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학생들의 반환소송과 법원 판결로 기성회비 폐지 압력이 커지자 교육부는 기성회비에서 지급하던 교직원 임금 삭감 계획을 발표했다.

9월부터 직원들의 기성회비 수당을 모두 없애기로 했고, 교수들의 기성회비 수당은 연구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바뀐다. 등록금을 주면 재원으로 하는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국고 지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교직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다.

이 조치로 당장 국립대 직원들의 임금이 1인당 연평균 1천만 원가량 삭감될 상황에 처했다. 그래서 전국공무원노조, 전국대학노조, 국공립대학교직

장협의회 등 대학 노동자들이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열었고 학교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반값등록금을 위해 수당 삭감이 불가피하다며 학생과 교직원을 이간질하지만, 직원 기성회비 수당 삭감으로 연는 등록금 인하 폭은 2.5퍼센트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2000년대 국립대 등록금 인상의 주범은 교직원들의 임금 인상이 아니라 국고지원금 하락이었다. 2012년 국립 일반대의 세입 중 국고보조금이 1997년 61.5퍼센트에서 2012년 47퍼센트로 크게 줄어들었고, 이 시기 국립대 수입 중 등록금 비율은 1997년 31.5퍼센트에서 2012년 39.2퍼센트로 높아졌다.

김조광수 씨의 결혼을 축하하며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야 한다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가 그의 동성 파트너인 김승환 씨와 9월 7일 야의 공개 결혼식을 올린다. "많은 고민과 망설임 끝에 여러분 앞에 서기로 결심"한 그들의 '당연한 결혼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수많은 평범한 동성 연인들도 이 '당연한 결혼식'이 9월 7일 하루로 끝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동성 연인들은 결혼제도가 보장하는 여러 혜택과 권리에서 배제돼 있다. 병원에서 파트너가 입원이나 수술을 하더라도 법적 보호자가 될 수도, 직장 내에서 육아휴직이나 간병휴가 등을 신청할 수도 없다.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될 때, 연인과 평생 살아가는 혼인 관계로 인정받지 못하는 동성애자들의 설움이 없어질 수 있을 것이다.

김조광수 씨의 결혼으로 동성결혼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권리는 아주 당연하다.

이슈가 되자, 우익들은 "전통적 결혼 붕괴"라며 날뛰고 있다. 심지어 우익 기독교 단체들은 이번 결혼식이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망하게 하는 악독하고 통탄할 반인륜적인 행사"라며 결혼식을 막아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종로경찰

서에 보내기도 했다. 경찰력으로 남의 결혼식을 "파괴"하려 하다니 정말 "악독하고 통탄할" 생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오히려 이번 결혼식은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고 있다.

동성결혼은 최근 많은 나라에서 법제화되고 있다. 우루과이, 뉴질랜드, 프랑스에 이어서 영국에서도 동성결혼 합법화의 문이 열리고, 미국에서도 동성 부부에 대한 차별을 규정한 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대형 기업들에서도 동성결혼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이런 분위기는 동성애자들이 침묵하지 않고 저항했기에 만들어진 결과다. 한국도 동성결혼이 하루 빨리 합법화되고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넓어지는 게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개혁들이 동성애자들이 이제 체제 자체에 도전하는 일이 필요 없어졌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자본주의 체제는 이른바 '정상가족'의 출산과 양육에 의존해 노동자들을 거의 공짜로 재생산하고 있다. 이런 체제의 필요 때문에 '정상가족' 밖의 동성애자들은 비정상적으로 낙인찍힌다.

그렇기에 동성애자들이 차별을 자꾸 재생산하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도전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하면 언제든 우리가 성취한 개혁도 되돌릴 수 있다. 동성애 차별이라는 '죄'를 완전히 없애려면 그것이 자꾸 자라는 자본주의라는 '시궁창'을 끌어버려야 한다.

양효영

소식·보고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9월 25일(수)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Report@left21.com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

저임금, 장시간 노동, 위장도급·불법파견에 맞선 파업에 승리를!

9월 4일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등 노동조건 개선, 원청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그간 열악한 노동조건에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묵묵히 살아온” 노동자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첫 파업에 나선 것이다.

노동자들은 공휴일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하루 꼬박 10시간씩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왔지만, 정작 임금은 고작 1백5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심지어 일부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

그런데도 사측은 마른 수건 쥐어짜듯 노동자들의 호주머니 털기에 여념이 없다.

그간 사측이 때먹은 수단이 적발된 것만 5억 원에 이른다. 사측은 업무에 들어가는 차량유지비·유류비·통신비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일하다 다쳐도 치료비 보상은커녕 사고처리 비용조차 온전히 노동자들의 몫이다.

사측은 또 각종 패널티를 만들어 매달 수십만 원씩 뜯어가는가 하면, 일부 업체는 노동자들이 조급이라도 늦게 출근하면 아예 3만~5만 원씩 월급에서 공제한다. 협력업체 과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정도로 현장은 무법천지다.

이도 모자라 업무가 끝난 뒤에도 노

동자들에게 영업을 강요했다.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반성문과 영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티브로드 사측은 지난 한 해만 1천8백8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업계 1위를 자랑하는 티브로드의 부와 명성은 이렇게 쥐어짜 노동자들의 파편으로 이뤄진 것이다. 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조건 개선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다.

티브로드 사측은 ‘하청업체 직원들의 문제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 하며 교섭조차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태광 티브로드 본사가 직접 하청업체 사장(센터장)을 임명하고,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실적·퇴출 등까지 관리해 왔다. 상당수 센터장들이 태광 티브로드의 임직원 출신이라는 점만 보더라도, 이들이 ‘바지사장’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진짜 사장’ 티브로드가 위장도급·불법파견으로 노동자들을 쥐어짜 온 장본인인 것이다.

바지사장

그러나 파업 이후에도 티브로드 사측은 노동자들의 요구에 묵묵부답인 채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또, 사측은 ‘나중에 두고 봅시다’ 하는 문자를 보내며 협박과 회유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대체인력 투입에도 “전국적으로는 불균등하지만 파업 참가가 높

은 센터에서는 업무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자들은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전면 파업을 멈출 수 있는 것은 대체 인력 투입이 아니라 진짜 사장 티브로드홀딩스가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며 투지를 불태우고 있다. 파업 이후 노동조합 가입과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씨엔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과의 연대 투쟁 속에서 임금 인상 등 노동조건 개선을 따낸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CJ대한통운택배, 삼성전자서비스, 이마트, 다산콜센터 등 곳곳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투쟁에 나섰다.

티브로드 비정규직 파업이 승리한다면, 간접고용·불법파견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드러내며, 삼성전자서비스 등의 투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들은 시민들을 만나고, 국정원 시국 촛불 집회에 참가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재벌 총수들과 손을 맞잡고 노동자 쥐어짜기 의지를 천명한 지금,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노동자 연대 투쟁이라는 과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승리를 위해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조명지, 유병규



‘진짜 사장’ 티브로드가 책임져라 파업에 나선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

재능

긴긴 투쟁 끝에 복직한 재능 해고자들

해화동 성당 종탑에서 2백2일 동안 농성을 벌이던 여민희, 오수영 동지가 지난 8월 26일 땅을 밟았다. 재능지부의 투쟁이 2천76일째를 맞는 날이었다. 그동안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지부는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 원직 복직”이라는 요구를 내걸고 투쟁을 벌여 왔다.

종탑 농성을 마무리하며 노조는 복직 투쟁 중 사망한 이지현 조합원을 포함한 해고자 12명의 즉각 전원 복직, 2008년 파기된 단체협약 회복, 각종 고소·고발 취하와 처벌 불원 탄원서 제출, 노조 생활안정지원금 및 노사 협력자금 명목 2억 2천만 원 지급 등을 사측과 합의했다.

재능 사측은 고공농성이 장기간 계속되고, 정진후 의원실이 재능 사측이 운영하는 사학 재단 비리 의혹을 파헤치려 하는 등 정치적 압력 속에서 한 발 물러선 듯하다.

그러나 해결할 문제는 남아 있다. 애초 노조가 요구한 학습지교사 임금에 관한 제도들(월 회비정산제나 마이너스 월별정산 제도 같은 수수료 제도)의 개선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졌다.

비리 의혹

황창훈 학습지산업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종탑 농성 정리 기자회견에서 “미흡한 성과지만 이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올해 남은 기간에 2013년 단

체협약을 반드시 갱신 체결하고, 특수고용자라는 위장된 개입사업자 허물을 벗고 당당하게 노동자로 활동하는 재능교육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재능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계속 싸워 나가기를 응원한다.

한편, 환구단에서 농성을 해 온 유명자 전 재능지부장과 강종숙 전 학습지산업노조 위원장은 “단체협약 원상회복 문구가 사실상 공문구에 지나지 않으며, 수수료 제도를 포함한 나머지 합의안도 실리적으로 아무 보장을 하지 못하는 껌뭉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번 노사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투쟁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백은진

기아차

외주화와 현장 탄압에 맞선 투쟁 승리를 위해

9월 5일 중식시간 화성공장 본관 앞에서 1백50여 명의 정규직·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모여 KD(반조립부품사업부)외주화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가 끝나고 분노한 조합원 70여 명은 굳게 닫힌 현관의 강화유리를 박살내고, 로비에 진입해 연좌 농성을 전개했다. 또한 사측의 외주화 시도를 받아들이고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에 항의 방문을 하고, 조립공장을 돌며 투지 넘치는 행진도 했다.

사측은 그동안 이윤이 많이 나는 KD의 일감을 야금야금 글로벌비스로 빼돌려 왔다. 글로벌비스는 정공구와 정의선이 주식 1백 퍼센트를 소유하고 있고 상속세를 때먹으려고 새운 물류회사다. 2001년 설립 당시 정의선은 20억 원을 출자했다. 그 후 일감몰아주기 등 온갖 편법으로 자산가치 3조 원, 주식가치 2조 원으로 고속 성장했다. 참 돈벌기 쉽다. 더 나아가 KD 부서 전체를 없애고, 강제전환배치를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화성지회 노조 집행부는 최근 사측의 주장을 똑같이 반복하며 ‘외주화를 합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성지회 노조 집행부는 3공장 대의원에 대한 사측의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47억 원, 1공장 안전사고 대응 투쟁으로 인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맞서지 않고 있다.

또한 9월 5일 ‘라인의 장기 부재 인원’에 가장 열악한 비정규직인 전문대 실습생 채용을 합의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올해 임금 별도 요구한 1번이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인데도 이런 합의를 한 집행부가 제 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아차 지부 집행부는 화성지회 집행

부의 일탈과 배신 행위를 당장 바로 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아래로부터 더욱 강력한 현장 투쟁을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조조정 위기에 처해 있는 KD 공장의 정규직·비정규직 조합원들과 고소·고발과 손해배상에 저항하고 있는 3공장, 1공장의 대의원들이 공동의 적에 맞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곳곳에서 벌어지는 현장 탄압과 구조조정 공세에 맞서 각각 투쟁해 왔다. 하지만 사측은 중앙집중적으로 현장탄압을 자행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연결

이를 위해 현장의 투사들은 현장 탄압 분쇄, KD 외주화 저지 투쟁을 아래로부터 연결하고, 현장 실천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기아차 지부 집행부가 현대차 파업 상황만 바라보며 전면적인 파업 투쟁을 회피해 온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차 지부가 9월 6일 잠정합의한 내용을 보면 심각한 수준이다. 일시금은 양보했지만 핵심 요구인 ‘기본급 대폭인상’, ‘정년연장’, ‘상여금 인상’ 등은 아예 진전이 없거나 부족하기 짝이 없다. 오직 일시금으로 현장 조합원들의 요구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 관련 기사 6면 이에 대해 현대차 현장 활동가들이 부결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럴 때 기아차지부가 강도 높은 파업 투쟁을 전개한다면, 현대차 조합원들이 부결을 선택하고 투쟁을 지속하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상호작용을 만들어 내는 게 현대·기아 현장 투사들의 과제이다.

김우용 기아차지부 조합원

서울시립대 청소노동자들

서울시는 제대로 된 직접고용에 나서라

올해 초 시작한 시립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이 2학기로 이어지고 있다. 뜨거운 맹별 아래서 노동자들은 매주 본관 앞 중식 집회와 시의회 1인 시위를 하며 자신들의 처지와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의 허점을 알리려고 노력했다.

시립대 청소노동자들은 올해 3월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직접고용이 됐다. 그러나 노동조건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학교 당국은 단체 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했고, 그나마 어렵사리 맺은 교섭도 서울시가 고용한 노무사가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렸다.

또, 노동조합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방해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침해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은 ‘준공무직’이라는 이름을 달게 되면서 정년이 기존보다 줄어 65세로 제한됐다. 내년 말이 되면 당장 65세 이상인 청소노동자 23명이 해고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오랜 비정규직 투쟁과 여론의 지지 때문에 박원순 시장도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오히려 이 정책이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더 심각하게 위협하게 된 것이다.

이런 현실 때문에 여러 정당, 시민사회 단체, 노동자·학생 단체 등이 모여 ‘서울시립대 청소노동자의 노조탄압 반대! 고용보장 정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8월 14일 학교 본관 안으로 들어가 집회를 열어 기세등등한 출범을 알렸다.

참가한 단체들은 힘있게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일이 어떻게 국공립대학인 서울시립대에서 벌어질 수 있느냐며 학교 당국과, 이를 묵인·방조하는 서울시를 규탄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학교 당국과 서울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회피하거나, 해결해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반년 넘게 시간을 끌고 있다. 결국 참다 못한 노동자들은 9월 10일 경고 파업을 결의했고, 개강 직후부터 학생들에게 파업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 투쟁은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용돈 수준의 연금(평균 13만원 정도)을 받고 살아야 하는 나이 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다. 또한 노동조합이 지적하듯 박원순 시장이 말하는 ‘노동의 상식 회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투쟁이다.

오동환 서울시립대 학생

독자토론광장

9월 25일(수)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의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습니다.

Letter@left21.com

1994년 공안정국을 돌아보며

공안탄압의 칼날은 ‘주사파’에 그치지 않았다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에 대한 마녀사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신으로의 회귀’를 말한다.

나는 유신 때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기억에 없지만, 대학생 때였던 1994년 공안정국은 똑똑히 기억한다.

김일성 사망 직전인 1994년 6월은 지하철과 철도 기관사 노동자들의 반격으로 노동운동이 꿈틀대기 시작하던 때였다. 김영삼 정부는 반격에 나서면서 파업 현장과 각 대학에 경찰 병력을 대규모로 투입해 6월 한 달에만 무려 2백 명이 넘는 사람을 구속했다.

7월에 김일성이 사망하고 조문 파동(국회 외무통일위에서 이부영 민주당 의원이 조문단 파견 용의를 물었던 것을 문제 삼으며 시작된 공안정국)이 터졌다. 김영삼 정부는 진보진영 일부 등의 애도 표명을 극렬 탄압하며 대북관계를 경색시키고 ‘주사파’를 핑계로 대대적인 내부 반대자 단속에 나섰다.

서강대 총장 박흥의 ‘주사파’ 발언으로 시작된 공안정국은 단지 주사파만 공격하지는 않았다. 무릇 모든 공안탄압은 체제의 반대자들을 노린다. ‘주사파’나 아니냐는 핵심이 아니었다.

경찰은 한총련 학생 1백40명에 대한 검거령을 내렸고, 전국 대학 주변에 경찰 2만 7천 명을 배치했다. 1994년 7~8월에만 1백20명 넘게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됐다. 이들 대다수는 ‘주사파’와 거리가 멀었다.

경상대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던 ‘한국사회의 이해’를 강의한 교수들은 ‘불



모든 정치적 반대자들을 노리는 마녀사냥 1994년 7월 21자 <한겨레> 1면.

은 교수’로 내몰렸다. 이창호, 장상환, 정진상 같은 분들이 국가보안법의 희생자가 됐다.

사회 분위기를 냉각시키려고 공안당국은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조작 사건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다. 안기부 공작원 출신인 한병훈·박소형 부부가 자신들이 북한 간첩이라며 의심스런 자수를 했고, 그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애먼 독일 유학생이 졸지에 간첩으로 둔갑해 3년 6개월의 실형을 살아야 했다.

풍물반이나 전통무예반 등의 활동을 하던 청소년 문화활동 동아리 ‘샘’에 “주사파가 침투했다”며 회원 9명을 대공본실에 구금했고, 1백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조사를 받아야 했다.

수업 중인 17살 고등학생들까지 마구 연행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해 청소년 문화동아리를 체제전복세력으로 만들었다. ‘샘’ 조작 사건 이후 학교 동아리 학생들에 대한 감시가 심해졌고, 유인물 살포를 강력하게 단속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공안탄압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국정원과 검찰이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의원에 내란죄를 들썩우는 것에 성공한다면, 친북 좌파뿐 아니라 혁명적 좌파와 다른 운동단체에게까지 마수를 뻗으며 사회 분위기를 냉각시키려 할 것이다.

공안탄압의 역사는 우리가 탄압에 맞서 단결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 준다.

안병철

동의 분열이나 조장하는 위와 같은 저질 양비론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더 큰 위협이다.

진보진영 일부가 이처럼 공안탄압을 강 건너 불 구경하듯 관조하는 모습은(아니, 어쩌면 은근히 반기기까지 하는 모습은) 이들이 말로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도 정작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마저 제대로 탑재가 안 된 심각한 혼란과 오류에 빠져 있음을 시사한다.

토론과 논쟁으로 해결할 문제와 공권력의 힘을 빌어 해결할 문제를 구분 못 하는 것이다. ‘종북주의’를 털고 가기 전에, 이참에 진보 일각에 이토록 만연한 ‘공안탄압 불감증’부터 털고 가는 게 순서일 것이다.

천경록

마녀사냥에 대한 진보 일각의 한심한 양비론 비판

통합진보당에 대한 마녀사냥이 고조될수록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이참에 털고 갈 것은 털고 가자’며 진보당의 ‘종북주의’와 ‘시대 착오적’ 혁명관을 질타하고 비웃는 태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경희대 이택광 교수는 심지어 이렇게 말한다. “국가보안법의 수혜자는 국정원과 통합진보당이다. 통진당이 국가보안법 때문에 힘을 얻고, 통진당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살 수 있다. 적대적인 것 같지만 공존한다. 그 과정에서 위협받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다.”(9월 2일자 <한겨레> 인터뷰)

이처럼 진보당을 무려 국정원과 동급의 반민주 세력으로 낙인찍는 이런 양비론은 폭력적일 정도다. 정권 진보당 같은 ‘종북’ 세력이 제거되면 국정원의 입지가 줄어들 것 같은가? 천만의 말씀이다.

국정원과 우파에게 ‘종북’은 어디까지나 탄압을 위한 빌미일 뿐이다. 빌미는 저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다. 루블화로 환전을 해도, 북한 포스터를 패러디해도, 심지어 체게바라 티셔츠를 갖고 있어도 누구나 제2의 이석기가 될 수 있다.

박원순마저 국정원의 음해공작 대상에 포함돼 있었던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저들이 진보당을 공격하는 진짜 이유는 진보당이 ‘종북’이어서가 아니라 기득권 세력을 위협하는 민중 운동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 민중 운동이 분열되고 약해지는 만큼 국정원은 더욱 살기등등해지고, 민중 운동이 강력하고 단결돼 있을수록 국정원은 음지로 내몰린다.

이 단순한 진실을 외면한 채 민중 운

다!

교도소에서는 각자 보고 싶은 신문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앙일보>를 보지요.

그러다 보면 방 식구들과 대화가 안 통해서 답답하기도 한데, <레프트21>은 저에게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동지들 감사합니다!

저보다 더 힘들게 싸우다 구속되고 장기간 수감돼 고생하는 동지들이 계신데, 이렇게 저까지 챙겨 주신 점 뭇

라고 감사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내 주신 신문 감사히 읽겠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기사 내용, 한 줄도 빠짐없이 방 식구들과 이야기 나누고 때론 보수 ‘찌라시’ 기사와 비교하며 토론도 해 보렵니다.

감사의 뜻은 출소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교도소에서 김근주(전국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드림.

고립이 두려워 매카시즘에 타협 말아야

국정원의 ‘종북’ 마녀사냥에 발맞춰 주류언론들이 연일 이석기 의원 패리기에 나서고 있다. 심지어 <한겨레>나 <경향신문> 같은 자유주의 언론들마저도 국정원의 마녀사냥에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취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진보진영 역시 질 떨어지는 양비론으로 후퇴하고 있다. 정의당이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찬성으로 당론을 정한 것은 이러한 저질 양비론의 퇴행적 귀결이다.

이들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해, 스스로를 “시대착오적이고 낡은 생각이나, 색깔론을 동원한 냉전수구적 사고와 모두 거리를” 두는 건설적인 진보로 포장하고 싶겠지만, 실제로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단지 “나는 이석기가 아니니 건드리지 말라”는 ‘찌질한’ 목숨 구걸에 불과할 뿐이다.

스스로 변혁 활동가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레닌은 사회주의자들이 ‘민중의 호민관’이 돼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 말은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변혁 활동가들에게도 유효한 말이다. 성적 소수자, 무슬림 이주민, 탈북민 등 모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공격은 그 자체로 우리 변혁 활동가 자신들에 대한 중차대한 도전이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마녀사냥에 맞서는 우리의 태도 역시 이래야 한다.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모두 그들의 신념과 정체성 때문에, 즉 존재 자체 때문에 공격받는 사람들이다. 보수언론과 우익들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라 요구한다. “김정일 개새끼 못 하면 다 종북”이라는 우익 변호사 전원책의 망발은 국민과 비국민을 가르는 선이 돼 우리의 정치적 자유 자체를 위협한다.

성적 소수자나 무슬림 이주민, 탈북민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의 처지가 이석기 의원이 놓인 처지와 얼마나 다른가? 그들은 하루하루의 삶 자체를 부정당한다. 이들은 공적인 영역에서는 물론이고 침실, 화장실, 사무실, 음식점, 미용실 등 일상의 모든 곳에서 스스로

를 부인해야 한다.

성적 소수자들은 스스로의 성적체성을 숨겨야 하고, 무슬림 이주민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히잡을 벗고 다녀야 하며, 탈북민들은 고향을 묻는 질문에 “강원도 출신”이라고 대답해야 한다. 그들은 하루하루를 ‘이석기’로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다.

미심쩍음

만약 이석기 의원에 대한 마녀사냥에도 제대로 맞서지 못한다면 이들에 대한 공격에도 일관되게 맞서 싸울 수 없을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종북 게이”라는 망발이 쏟아질 때 변혁 활동가들이 “나는 종북도, 게이도 아니다”라는 말을 먼저 한다고 생각해 보자. 정의당을 포함한 일부 진보진영이 이런 사태를 두고 취하는 입장은 이와 전혀 다르지 않다.

몇몇 사람들은 우리가 고립을 자처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이석기 마녀사냥에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조차도 국정원이 이 카드를 들고 나오는 시기가 상당히 미심쩍다는 데서는 아무 이견이 없다.

그러나 설령 이 길이 고립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선택지는 하나다.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이란, 나이지리아 같은 곳에서 동성애자 차별에 반대하는 것은 사회적 고립을 자처하는 일이다.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 터졌을 때 그를 방어하는 일 역시 고립을 택하는 길이었다. 제2차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유대인 차별에 반대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왕따의 길을 걷는 것이었다.

하지만 진정으로 사회 진보를 바라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이 ‘고립의 길’을 걸을 때 그 길은 더는 고립의 길이 아니게 됐다.

이 말도 안 되는 매카시즘에 단호히 맞서 싸우면, 모두가 ‘고립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는 분명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김소망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저들이 진보당을 공격하는 이유는 진보당이 민중 운동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감옥에서 온 편지

“<레프트21>은 저에게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경찰서 유치장부터 교도소까지 저와 밥을 함께 먹고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들, 그리고 경찰, 교도관, 때로는 저를 조사했던 검찰 조사관까지도 “김근주 씨는 자기 이익을 위해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대중과 조합원들의 권익을 주장하다 투쟁하셨기에, 우리가 고맙게 생각해야지요.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치 이야기만 나누면 ‘빨갱이’로 구분돼서 미치고 환장합니

다! 교도소에서는 각자 보고 싶은 신문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앙일보>를 보지요. 그러다 보면 방 식구들과 대화가 안 통해서 답답하기도 한데, <레프트21>은 저에게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동지들 감사합니다! 저보다 더 힘들게 싸우다 구속되고 장기간 수감돼 고생하는 동지들이 계신데, 이렇게 저까지 챙겨 주신 점 뭇

라고 감사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내 주신 신문 감사히 읽겠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기사 내용, 한 줄도 빠짐없이 방 식구들과 이야기 나누고 때론 보수 ‘찌라시’ 기사와 비교하며 토론도 해 보렵니다. 감사의 뜻은 출소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교도소에서 김근주(전국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드림.



‘화학무기’ 핑계로 혁명을 훔쳐가려는

서방의 시리아 공격 반대한다

차승일

미국과 서방의 시리아 공습 시도가 속도를 내고 있다. 영국 의회에서 시리아 공습안이 부결되면서 주춤하는 듯했지만 쉽게 포기할 리 없는 것이다.

오바마는 의회에 시리아 공습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며 “나는 군사 개입을하기로 결정했다”고 분명히 했다. 미국 국무장관 존 케리는 “시리아를 응징하지 않으면 … 북한, 이란 등에도 대량살상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끔찍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며 의회 승인을 촉구했다.

9월 4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시리아 군사 개입안을 승인하고 공화당의 대표적인 하원의장 존 베이너도 시리아 공격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상하원 모두에서 시리아 공습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제국의 위신’이 걸린 문제기 때문이다.

미국과 서방 지배자들은 화학무기 사용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들이야말로 화학무기 사용이라는 “레드 라인”을 번번이 넘어 온 장본인이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과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화학무기를 사용했다. 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 때는 당시 미국의 우방이었던 이라크의 후세인이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방조했다.

지난해 1월 영국 정부는 사린 가스의 재료인 불화칼륨과 불화나트륨이라는 화학물질을 시리아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게다가 서방의 군사 개입은 독재자의 학살 등을 막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불러 왔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낳은 참상만 봐도 알 수 있다.

지금도 2백만 명이 넘는 시리아 난민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지원도 보내지 않는 서방이 ‘인권’을 들먹이는 것은 위선일 뿐이다.

무엇보다 미국과 서방의 공습은 시리아 혁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첫째, 수많은 평범한 시리아 민중이 희생될 것이다. 저들이 말하는 ‘외과 수술 같은’ 폭격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만일 미국과 서방이 ‘제국적으로’ 개입한다면 오히려 학살자이자 독재자인 아사드에게 ‘반제국주의 투사’라는 거짓 명분을 제공해 진정한 혁명세력을 더 고립시킬 것이다.

만일 서방이 아사드를 끌어내리기 위해 전면적으로 개입한다면 그 과정에서 서방은 지역조정위원회(LOC) 같은 혁명적 구심과 자치 네트워크들을 파괴할 것이다.

사실 미국과 서방의 진정한 목표는 ‘화학무기까지 사용하는 독재자의 제거’가 아니라, 아랍 혁명 도둑질과 제국주의 패



사진 출처: Balazs Gardi (블라디카)

서방의 개입은 민중의 재앙 서방의 ‘정밀한’ 폭격으로 아수라장이 된 아프가니스탄의 한 가정.

권 회복이다.

그동안 아랍 혁명으로 미국의 중동 지역 핵심 동맹인 이집트 정권이 크게 흔들렸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등의 친미 독재자들은 혁명이 자국으로 불붙을까 우려해 왔다. 시리아 아사드까지 민중 혁명으로 무너지면 이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은 더 위협받을 것이다.

제국의 위신

게다가 2008년 시작된 세계경제 위기 속에 불거진 아랍 혁명은 유럽 노동자 총파업, 미국의 ‘점거하라’ 운동 등으로 불씨를 옮겨 왔다. 서방은 이 불씨도 없애고 싶어 한다.

이집트 군부가 민간인 학살과 반혁명 공세를 시작한 상황에서, 미국이 시리아 폭격을 결심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과 서방의 뜻대로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하고 나토 사무총장이 “[나토군의] 병력 파견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등 미국의 시리아 공습 동맹 구축이 삐걱거리고 있다.

미국 지배자들 내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또한, 오바마는 아프가니스탄·이라크의 악몽에 짓눌려서 계속 시리아 공격을 주저해 왔다. 애초 소규모 ‘군사자문단’ 파견으로 시작했다가 재정적 패배로 끝난 베트남전쟁의 기억도 떠오를 것이다. 아사드를 제거해도 친미 세력이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게다가 시리아 정권은 그동안 팔레스타인 민중 저항을 파괴하고, 1992년 걸프전에 파병하고, 2003년 이라크 전쟁을 지원하며 미국 주도의 중동 질서를 지키는 구실도 했다. 그래서 미국 지배자들 중 일부는 아사드 몰락이 과연 좋은 일일까 하는 의구심도 갖고 있다.

공습이 통제하지 못할 상황을 낳을 수도 있다.

“군사 개입의 목표는 정권 교체가 아닌 ‘일회적’ 공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일회적’ 공습이 성공한다면, 미국과 서방은 더 큰 모험에 나설 자신감을 얻을 것이다.

한편, 러시아, 이란, 중국도 시리아 민중의 편이 아니다. 러시아 등이 그동안 미국과 함께 추진해 온 ‘평화회담’은 아사드 퇴진조차 전제로 하지 않았다.

또한 러시아 등은 무기와 돈을 지원하며 학살자이자 독재자인 아사드 정권을 지명해 왔다.

러시아는 중동 지역에 남아 있는 유일한 동맹국이자 지중해 진출 통로인 시리아를 잃고 싶어 하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 시리아 현지의 혁명가들은 “미국도 러시아도 반대한다! 사우디도 이란도 반대한다!” 하고 외치고 있다.

시리아 민중만 희생시키며 혁명을 왜곡시킬 서방의 군사 개입을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독재 정권을 무너뜨릴 진정한 힘은 제국주의 미사일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민중 투쟁에 있다.

제국주의에 부역하는 박근혜 정권

박근혜 정권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시리아 등 문제에서 미국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고 왔다.

국방장관 김관진은 최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백악관이 시리아에 대해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수수방관하면, 북한은 남한 주민에 대해 화학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리아 공습 시도를 지지했다.

게다가 한국은 시리아 국경에서 불과

4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동맹부대를 파병한 상태다. 동맹부대는 헤즈볼라를 단속한다고 파병됐는데, 이미 헤즈볼라는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전투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서방 공습으로 전장이 확대되면 동맹부대가 전투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이미 인근의 오스트리아 부대는 6월에 전원 철수했다. 제국주의의 부역자 노릇을 하는 동맹부대는 즉각 철수해야 한다.

세계 곳곳의 시리아 침공 반대 목소리

서방의 시리아 침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시리아 침공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8월 31일 영국에서는 5천 명이 서방의 군사 개입에 반대하며 런던 도심을 행진했다. 이런 행동은 영국 의회가 시리아 공습안을 부결시키도록 압박하는 구실을 했다.

이 밖에도 미국 여러 도시, 캐나다, 터키, 이집트에서도 서방을 규탄하는 시위가 있었다. 특히 미국에서는 공습 반대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이다.

9월 5일에는 한국에서도 반전평화연



제공: 장지

대(준) 등 48개 단체의 주최로 서방의 시리아 군사개입을 반대하고 한국 정부의 시리아 침공 지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 자세한 내용은 본지 온라인 기사 참조.

“승리는 시리아 민중 자신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가야스 나이스 시리아 혁명적 좌파 경향 활동가

“시리아 혁명은 민중혁명입니다. 노동자, 청년 대중, 농촌 빈민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시리아 혁명은 노동계급이 많이 사는 도시에서 시작돼 농촌 지

역으로 확산됐습니다.

이 아래로부터 혁명은 다마스쿠스, 홀스, 알레포, 데라, 데이르에주르 같은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민중위원회를 건설해 저항운동을 조직하고 민중평의회를 건설해

해방된 지역을 운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적들과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에는 러시아, 중국, 이란, 헤즈볼라의 지원을 받는 잔인하고 야만적인 독재 정권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미국과 서방이 지원

하는 반혁명 기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석유 왕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반대한다. 사우디도 이란도 반대한다.’ 우리는 민중이 운영하는 시리아, 노동하는 대중이 통제하는 시리아를 바랍니다.

우리의 승리는 오직 우리 자신의 힘으로만 쟁취할 수 있습니다. 서방 열강들은 우

리의 혁명을 탈선시키고 싶어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제국주의적이고 종파적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참담한 패배와 마주칩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은 억압당하고 저항하는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해야 합니다.

▶ 관련 기사 10면

출처 영국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69호 / 번역 최민혁